

제426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2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4.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5.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6.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7.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8.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4)
9.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10.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11.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12.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13.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14.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15.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1)
16. 2025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2)
17.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3)
18.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19.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20.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21.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22.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23.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4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4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4
4.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4

5.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4
6.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4
7.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4
8.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4)	4
9.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5
10.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5
11.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5
12.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5
13.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5
14.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5
15.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1)	5
16.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2)	5
17.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3)	5
18.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5
19.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5
20.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5
21.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5
22.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5
23.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5

(14시41분 개의)

○소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한병도 위원입니다.

여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추경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소영 간사님, 박형수 간사님, 안도걸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을 모시고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입니다만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이번 추경안을 충실히 심사함으로써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는 양당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소영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민생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시점에 잘 흘러들어 가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축축하게 적실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소위원회 잘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박형수 간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박형수 위원 어제 그리고 그저께, 이틀에 걸쳐서 우리 종합질의를 했습니다. 종합질의 과정에서 나온 이번 추경의 문제점들을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짚어 보고 또 다른 부분의 대안은 없는지도 함께 같이 검토하는 그런 소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예산결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은 현재 빈혈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긴급수혈 조치다, 또 그리고 지금 거의 질식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민생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인공호흡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추경이 빨리 국회를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주 신속한 추경 심의와 토의가 이루어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예결소위 조정훈 위원입니다.

오늘 한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5년 2차 추경소위 활동을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의 목적은 동의합니다. 민생을 회복하고 경기를 살리자라는 목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추경은 다 아시는 대로 빚을 내서 하는 추경입니다. 이미 정부가 제시한 추경만 해도 국민들이 일인당 45만 원씩 빚을 갚아야 할 정도의 막대한 국채, 빚을 내는 추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특정 예산들이 빚을 내서 지출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짜고 집행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집행 가능성 여부도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농해수위 경북 의성 임미애 위원입니다.

민생이 지금 질식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번 추경이 결국은 마중물이 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고 질식할 것 같은 민생경제에 빚을 내서라도 숨통을 틔울 수 있다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생이 최대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부산 사상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대식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하게 돼서 영광스

럽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민생 문제에 있어서 선택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빛을 내서 이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저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로 전향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 추경에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부적으로 본예산으로 넘길 것이 있으면 또 본예산으로 넘기는 그런 과정의 심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 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이소영 간사님 그리고 박형수 간사님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이틀간 종합정책질의가 충실하고 의미 있게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종합정책질의의 의미 있게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신속하게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어 현장의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위원님들 열심히 보필해서 성과 있는 결과물이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신우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보다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국회 예결위 소위 심사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4.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5.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6.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7.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8.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4)

9.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10.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11.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12.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13.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14.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15.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1)
16.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2)
17.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3)
18.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19.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20.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21.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22.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23.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14시49분)

○소위원장 **한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로마자 5번 심사 대상과 방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대상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 내용입니다.

다음 심사 방식입니다.

전체적인 심사 순서는 감액 심사, 증액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액 심사 건수는 약 72건이고 증액 심사 건수는 약 426건입니다.

심사 결과 보류된 사업은 추후 위원장님과 간사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오늘 현재 기준 미의결된 상임위에 대한 심사 여부 및 방식도 위원장님과 간사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감액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부처 의견 청취, 위원님 질의, 소위원회 결정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액과 증액이 직접 연계된 감·증액 연계사업은 감액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 심사는 위원장님과 간사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심사는 간사님 간 합의에 따라 각 교섭단체 위원님 중 한 분씩 총 두 분으로 구성된 별도 심사기구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별첨 자료에는 심사 대상 부처와 2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계획에 따라 부대의견에 대한 심사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위원님, 국민의힘 조정훈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수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편성된 상임위는 총 13개 상임위이며 현재 시간 기준 이 중 11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상단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상임위 심사 결과 총수입은 감액이 3292억 2000만 원이고 총지출은 증액이 9조 6061억 5100만 원, 감액은 51억 8700만 원으로 순증액 규모는 9조6009억 6400만 원입니다. 위원회별 구체적인 증액 및 감액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는 부처별 예비심사 결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제가 쓰지 못했습니다만 간사님 간 합의에 따라 아직 의결하지 못한 정무위와 산자위는 해당 상임위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시까지 해당 상임위가 의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 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기된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 내용을 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감액 의견이 있는 사안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으로 교육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교육부차관 오석환입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 자료 1권 교육부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먼저 연번 1번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AI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연구단 지원을 통해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구 중심 모델이어서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와 간극이 있고 연구단 확대는 중장기 구조개편 과제로서 본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추경 증액분 12억 8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감액에 관련해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AI 고급인재의 적시 양성이 시급하고요. 4단계, 즉 2020년부터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서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신설해서 산학 협력 연계를 강화 중에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서 인재 양성 생태계 마련을 위해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질문인데요,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제고라는 게 석박사급 얘기를 하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BK21 사업이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입니다.

○**임미애 위원** 지난번에 R&D 예산 삭감되면서 박사급 인력의 유출이 좀 심각한 것에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유출되었는지 혹시 확인된 바가 있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사업별로는 재정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 BK21 사업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7년 단위로 사업을 기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요청한 거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한병도** 그럼요.

○**조정훈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본 추경의 목적은 민생경기 회복입니다. 그리고 민생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

달하는 그것이 이번 추경의 기본 기조지요,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정훈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본 사업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은 과연 추경의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저는 아직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자료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미 본 사업은 제1회, 저희가 지금 2차 추경인데 1차 추경에서 5000억을 이미 증액을 했고 이번에 1286억을 추가로 증액하자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R&D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저도 인지하고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 사업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또 현재 BK21 교육단이 과연 어떤 연구 성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실무로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 저와 저희 의원실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 빛을 내서 추경에 더 증액할 만큼 확실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2020년부터 2027년까지 거의 한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본예산, 추경에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은 중장기 구조 개편 과제지 단기 경기 대응이나 긴급수요 사업 대응에는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지출, 있으면 더 추경을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제한된 재원으로 가장 민생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우선 순서대로 지출 구조를 잡는다면 본 사업은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안도결 위원님.

○안도결 위원 지금 AI 고급인력 확보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경쟁적으로 인력 확보에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겠다는 건 12억이지요, 1200억이 아니고?

○교육부차관 오석환 12억입니다.

○안도결 위원 그래서 한 12억, 13억을 더 추가하겠다는 거고.

여기 지금 필요한 인력 있잖아요. 때를 놓치지 않고 3개 연구단을 지금 신설을 해서 필요한 인력을 바로 뽑아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떤 내용이에요? 그 절박성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BK21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석박사 과정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연구 인력들이 충분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분야 중에서 AI 분야 인재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은 고급인재 양성이 필요한 것이고 고급인재는 석박사의 연구생들입니다.

석박사 과정에서는 시기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편성을 했을 때 남아 있는 기간만으로 계산하더라도 저희는 2년간의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마련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AI 분야의 BK 인재를 같이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러니까 지금 AI 쪽에 전혀 프로그램이 없다 이겁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이것을 직접 지원하는 연구단은 지금 없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조정훈 위원님, 이게 AI 분야의 연구단 3개를 추가로 지원하는 거면 결국 이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생계와 같은 거거든요, 연구원들한테 지원하는 돈은. 그래서 120억도 아닌데 저는 12억 정도로 AI 연구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다면 이것 정도는 국가가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제가 냈기 때문에 자꾸 말안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게 12억이든 1억이든 200억이든 추경 목적에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빚내서 하는 추경인데 이게 연구 인력의 월급, 인건비를 주다가 뺏는 거 아니고 추가로 추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00억이라는 돈이 이미 본예산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민생 회복 이것에는 별 큰 관여가 없습니다. 연구소 연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많은 지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과연 이런 정도의 목적사업이 민생경기 회복에 적합한지 저는……

저는 교육위 간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 예산 깎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다른 증액 요구들도 많고 결국 예산의 지출의 우선순위를 고민함에 있어서 본 추경 12억 원은 저는 이번 추경 예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AI 우리나라 국가 인재 양성, 후속 세대 양성에 적극 동의합니다만 이미 500억이 있고……

차관님, 이것 500억 이미 다 쓰셨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5224억이 BK 사업의 전체 재원이고요.

○**조정훈 위원** 그래서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현재 이것은 불용률 없이 계획대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규모가 워낙, 연도별 집행 계획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잠깐 정정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의 AI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3개를 추가하는 사업이고요.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가 이 부분은 이미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연초에 고용한 석박사들의 인건비는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추경과 관련 없이?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기존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3개의 추가적인 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아까 1차 추경에서 5224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추가하는 거다 이렇게 언급하신 게 있어서……

○**조정훈 위원**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시다.

○**이소영 위원** 그건 아니고, 기존 본예산 플러스 1차 추경이 이 정도이고 이걸 전체 BK21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이 예산 항목이 지금 집행률이 99%가 넘는 사업이고 올해만 단편적으로 보면 12억을 추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사업이라

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견이 분분하니까 일단 보류했다가 추가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차관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금 산업계의 수요가 절박하나 그리고 규모가 적당하나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하고 교육부가 파악한 바 현장에서는 AI 고급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아우성이고요. 저희가 또 별도로 이렇게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지금 연간 3000명 이상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12억 정도 하는 것은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을 생각해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12억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사님.

○박형수 위원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 가지고는 감액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니까 이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능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걸 줄이고 의견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얘기가 타결될 기미가 없으면 보류하는 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가야지 감액 심사를 다 할 수가……

○소위원장 한병도 아주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김대식 위원 내가 한마디만 더 하고……

차관님, 실질적으로 집행 과정에서 연구기관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소영 간사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99%라고 치더라도 거기에서 집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것은 저희가 확인합니다. 확인했을 때 이 사업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단을 구성할 때 이미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생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특별한 예외가 없는 경우에는 100%이고요.

지금 전체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6월까지의 실집행률이 61.7%입니다.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면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1~2%의 불용률 제외하고는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야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는 다 내려갔는데 대학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에서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충분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다른 사업하고 달리 BK21 사업은 정확히 실집행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사합니다.

박형수 간사님의 시의적절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는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교육부 마지막 감액사업입니다.

2번,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맨 위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보수사업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시설물을 성능 개선하고 유지보수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낮고 구체적인 보수계획 없이 37개 대학에 균분하는 증액은 추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경 증액분 1957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사업 추경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먼저 국립대학 보수사업은 특성상 저희가 방학 중에 공사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 재원은 연내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 수요가 저희가 1조 3000억 원 정도의 추가 수요가 있습니다. 재정 정상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1970억의 사업비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이것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37개 국립대학의 외부 창호 교체해 주고 화장실 개선 사업 해 주고 노후된 냉난방기, 에어컨 고치고 이런 데 쓰는 예산인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보수사업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37개 대학에 수요조사해 봤더니 1조 2600억 원 수요가 왔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총수요는 1조 3000억인데 그중에 이번에 1900억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가 빚내서 하는 추경인데 지금 시설 확충을 해 주지 않으면 수업 진행이 안 됩니까? 이번 학기 다 진행하고 있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정훈 위원 화장실도 다 쓰고 있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조정훈 위원 에어컨도 들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빚내서……

그리고 1조 2000억 원 요구했는데 2000억 원이니까 결국 이것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n분의 1로 나눠서 줄 겁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것은 저희가 실집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1조 2000억 원인데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요구하신 예산이. 그러면 각 대학에 6분의 1씩 나눠 줄 겁니까, 요구한 것의?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예산 배정할 때 너무 잘 아

시는 것처럼 연도 그다음에 시급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국립대학 시설 확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냉난방기 그다음에 옥상 방수, 깨끗하고 청결한 교육환경 제공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걸 그냥 일반예산으로 본예산에 담아서 주기를 정해서 하는 거지……

지금 보수사업이 여기 들어 있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생경기 회복 그 항목으로 이걸 넣으신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경기회복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결국 대학의 시설공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민생을 살리겠다 이 뜻이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번의 추경 목적에는 그쪽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빚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게 동의가 안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지하고 다른 건 다 교육환경이고 다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빚을 내는 상황에서 37개 대학에 화장실 고쳐 주고 에어컨 고쳐 주는 게 과연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더 세금을 걷어서 줄 만큼의 상황에 맞는지 그리고 이게 민생경기 회복 예산으로 볼릴 수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 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것 수요 조사하신 걸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실수요 조사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정말로 긴급한 데가 있을 거고 조정훈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은 그래도 여력이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정말 올해 방학 중에 긴급하게 해야 되는 곳은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상세 내역은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립대학의 시설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요가 1조 30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이미 채원 사정상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일단 투자를 통해서 경기부양 효과도 있는 측면에서 2개를 동시에, 그러니까 시설 개선하고 경기부양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서 최소 재원을 배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을 빼고,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정말 시급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수요를 저희 소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의 문제 제기도 전혀 납득 못 할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걱정한 지적이십니다.

○**임미애 위원** 저도 경북대를 가 보고 그때, 작년인가 국감 갔을 때 의원들이 귀신 나올 것 같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 곳도 많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미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자료를 추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형수 간사님.

○**박형수 위원** 웬만하면 양쪽에 이견이 있으면 보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도 삭감하지 않으면 저는 이 전체 중에 삭감할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긴급한 부분 이것 사실은 교육부 예비비 있지요.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다 그러면 예비비로 하면 되고, 이게 과연 추경을 할 만큼의 그런 긴급한 사안인지 이것은 좀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꼭 필요한, 임미애 위원님 얘기하신 이 부분은 교육부의 예비비로 이것을 충당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모든 부분이 다 조금이라도 이게 일말의 타당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하면 하나도 삭감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저희는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저도 대학 총장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교육, 국립대학 굉장히 열악해요. 하는데, 지금 이미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추경이 집행된다 해도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겨울방학이 돼야 돼요. 중간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삭감하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본 취지는 동의하고 본예산에 넣어도 겨울방학 때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해도 이게 집행이 안 돼요. 집행이 되겠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면 학기 중에 할 수 있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1, 2월……

○**김대식 위원** 창틀 바꾸고 이러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창틀을 바꿨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1, 2월에 하는 사업하고의, 그것은 집행계획에 따라서 수립을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1, 2월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이번에 꼭 해야 되겠냐 이거지.

○**소위원장 한병도**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서울지역의 대학들 노후 시설 많아요. 그런데 다만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잘라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지금 저도 가서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아직도 수세식으로 안 된 데도 있고,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공계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밤새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를 들어서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냉방 같은 것이 안 되어 있으면, 특히나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시설들도 많더라고요, 장비들도. 그래서 안전도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수요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 5% 정도 수용을 했네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긴급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추경의 목적이 어떻게든지……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지요. 지역경제가 소상공인들하고 건설업이에요. 건축업들 그리고 인테리어 사업으로 소소하게 먹고사는 분들의 경제난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러한 사업들, 자그만 이런 사업들이 정말 영세한 우리 건설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주택업자들 이런 분들의 숨통이 트이는 예산이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기회에 좀 빨리 진행시켜서 지역 건설업체도 조금 숨통이 트이게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밤새워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소요를 좀 줄일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이거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전액 감액은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보류합시다, 보류.

○소위원장 한병도 예,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교육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과기정통부1차관 이창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제2차관 류제명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23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중액사업 7건 있습니다.

먼저 1번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AI반도체 최적화 설계지원 사업은 국산 NPU가 다양한 AI 모델을 최적화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구조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1차 추경 시 이미 유사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 반복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추경의 시급성도 저조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두 번째 칸입니다. 국산 NPU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2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산 AI반도체, NPU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AI 모델 개발하는 데 엔비디아가 하는 GPU가 글로벌 독점인 반면에 앞으로 시장이 무궁무진한 추론형 반도체인 NPU는 서

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글로벌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큼니다. 거기에는 절대 강자가 없어서 지금 우리 기업이 빨리 실력을 쌓고 고도화된다면 굉장히 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1차 추경과 유사사업으로 보시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1차 사업은 지금 시급히 우리 국산 반도체를 써 줄 수 있는 레퍼런스 확보 차원에서 실증 인프라를 만들자는 것이었고요. 그 가운데 지금 도전하고 있는 우리 NPU 기업들 또 수요기업들이 2차에 대해 굉장히 시급한 수요들을 제기했는데요. 그게 최신 AI 모델들 간의 호환성을 확보해서 고도화를 한다면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그렇게 2차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할까요.

제가 보니까 1차 추경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고 그때 추경 필요성이라고 정부에서 제출한 걸 보니까 ‘다양한 서버와 엣지형 국산 NPU가 출시·양산 중으로 본격적인 시장 창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실증 확대 필요’ 이렇게 추경 요청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제 2차에서는 설게 고도화와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1차에서는 양산한 다음에 실증한다고 하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전략이 바뀐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1차에서, 지금 저희 사정이 어떠냐면 최근에 메타가 우리 국산 반도체 퓨리오사를 1조 2000억에 인수합병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것을 일단 우리 기업이 거부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퓨리오사마저도 특정 AI 모델, 그러니까 라마나 또는 딥시크 같은 몇 가지만 지금 최적화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NPU 경쟁은 다양한 AI 모델에 얼마나 호환성 있는 것으로 개발이 되면 더 큰 경쟁력 얻을 수 있는데 1차에서의 상용화는 몇 가지 한정된 AI 모델로 최적화를 한 것이고요, 저희 시장에서의 요청은 라마 또 딥시크, 챗GPT,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AI 모델들을 상호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장선상이나 순서가 좀…… 그런 차원이 뒤바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또 질적으로 좀 다른 단계의 사업을 요청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1차 추경 때 얼마 요청하셨지요? 얼마 받아 가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1차 추경 때 저희가 440억이 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2차 추경 때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300억을 요청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1차 추경 때 증액한 예산은 지금 집행 다 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지금 두 달 공고 작업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이것은 전략도 부재해 보이구요. 그냥 반복적인 예산, AI가 약간 무슨 마술의 단어 같아요. 예산에서 AI 단어만 들어가면 ‘그래, 필요하지’, ‘AI 해야지’. 그런데 큰 틀에서 과기부가 지금 전략을 갖고…… 처음에는 양산 이후에 실증하겠다고 해서 400억 해서 양산 상용화, 조기 상용화 지원해 달라고 해서 400억 드렸는데, 지금은 아까 큰일이 생겼다 그래 가지고 전략을 수정해 가지고 설계 고도화와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설계 지원 예산 지금 300억 요구하신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조정훈 위원 일반예산이고 매년 달라지면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생회복 하느라고 어렵게 어렵게 예산 다른 부처에서 짜내서 지원하는 건데 너무 여유만만하게 그냥 똑같은 사업에다가 300억 덜컥 요청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1차 사업 어느 정도 결과를 보기도 전에 300억 넣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저는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임미애 위원 300억이에요?

○조정훈 위원 30억.

○김대식 위원 30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300억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300억이에요, 300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300억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은 꼭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저희 대한민국이 AI 후발주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영역이고. 돈을 안 줄 거면 몰라도 주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이 분야에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요구되는 예산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를 드리기가 어렵지만 새롭게 개척이 되는 영역에 대해서 어설프게 예산을 삭감하면 이 산업은 오히려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있다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것은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하시지요.

○안도걸 위원 2차관님, 이것을 좀 정확히 하세요. 지금 조정훈 위원님 지적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1차 추경 때는 시설계가 이미 된 것들을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양산을 하는 그것을 지원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이번에는 뭘니까? 그보다 더 새로운 용도에, 그러한 NPU……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겠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새로운 일종의 R&D성의 사업인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그렇고.

또 NPU는 그 용도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다양합니다.

○안도걸 위원 모든 분야에서 특정 기기라든지 제품에 녹아들어 가지고 그것을 구동시키는 AI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는 것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은 양산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초기에 설계를 해 주는 것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안도걸 위원 그래서 이 두 사업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할 수 있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김대식 위원님께서서는 이 사업을 조금 증액하자……

○김대식 위원 아니, 증액을 하는데……

○안도걸 위원 예, 이렇게 좀 하자 그러셨지요.

○김대식 위원 전체적인 것을 봐도, 전체 한 300억 봐도 한 30억 정도만 해 주고 상황 봐서 하자는 그거였지요, 이것은 증액에 대한 거니까.

○안도걸 위원 그러면 삭감이네요, 270억 삭감.

○김대식 위원 270억 삭감, 30억 정도는 해 주자. 이렇게 하고 상황 봐서……

○안도걸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

○임미애 위원 그런데 위원님은 공간 구축이고요.

○김대식 위원 예, 공간 구축.

○임미애 위원 이것은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안도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 이게 AI 모델 최적화로 해서 설계구조 했잖아요, 그렇지요? 설계구조로 해서 지원했잖아요, 일차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제한된 용도와 영역으로 해 본 거고요. 이것은 새롭게 좀 더, 다양한 모델들 간의 호환성을 확보해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시도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조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AI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유사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고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봐서 추경의 시급성이, 저는 굳이 지금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보류하고, 과기부에서는 조정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2차 추경의 내용이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일단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AI반도체 실증지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2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지정하고 보호·관리하는 등 정보보호 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3개 내역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호 체계 강화 사업에서 25억 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에서 10억 원,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내역사업에서 32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두 번째 칸입니다. 정보보안 체계 점검 강화 및 사고 긴급 대응을 위하여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2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보보호 관련된 예산을 급히 요청드리는 것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인해서 우리나라 각 주요 기업들과 중소기업의 보안 실태 그리고 저희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지금 AI가 진전되면서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까지 제도에 여러 가지 불비한 점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은, 지금 요청드린 지원은 대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들이 아니라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이나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을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취약점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저희 과기정통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도 지방에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가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발생하는 또 중소기업들한테 발생하는 해킹 사고가 9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센터에 나가 있는 기능인력이나 이런 솔루션들이 아직 확충이 안 돼 있어서 지역 현장에서 대응력을 강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열 군데 지역센터에 인력을 보장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솔루션들 보장을 급히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차관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를 하고요, 일부는 국가가 대기업 보안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지금 우리가 공수가 바뀌어서,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야당인 민주당에서 가만있었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고.

민간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 보안체계를 유도할 장치를 마련해야지 정부가 정부 돈으로 대기업을 보호하고, 그것도 추경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납득이 안 갈 수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기업을 자율입니다. 중소기업과 지역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는, 이번 SK텔레콤도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기반시설 보호하는 체계를 보니 정작 저희가 지정해 놓은 대상 서버는 안 뚫리고 다른 서버가 뚫렸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에 돈을 줘서 보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취약점들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기본방향은 대기업은 저희가 지적해서 자율적으로 그런 역량에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과 중소기업은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는 예산을 급히 요청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을 집행하는 데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담보할 수 있어요? 걱정하게, 이게 그런 오해를 사지 않고 걱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담보할 수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님. 집행 과정 보고드리고 또 집행하면서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는지는 투명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를 드리면서 관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해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 차관님,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게 세 가지 꼭지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안도걸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건대 두 번째, 세 번째 꼭지 있잖아요, 정부가 해야 될 인프라예요.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첫 번째 지금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서버 같은 통신기반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겠다 이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저희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정통부가 알아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인 대기업이 그거를 해라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을 대기업이 지불토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100% 투자는 SK텔레콤이나 다른 대기업들이 해야 되고요. 저희가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안 투자는 대기업 몫으로 온전히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증액 요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놓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인 공백을 메우자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취약점, SK텔레콤이 오픈소스를 사다가 서버에 깔았는데 저희가 그런 걸 점검하는 데 기존에 툴이 없어서 그걸 주시면……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점검할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를 하고 이에 맞춰서 당신네들이 하시오 그리고 객관적인 외부 기관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고 보완하세요라고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꼭 그것을 굳이 정통부가 국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에게 지침을 주고 하도록 하고 그것의 결과를 점검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지침을 만들고 취약점 분석하는 저희의 툴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권고를 하면 실제 이행은 대기업 회사들이 직접 자기 비용으로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될 일,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될 일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이소영 위원 자료제출 받는 걸로 하고 이거는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사업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부문에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추경의 시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예산집행 가능성이 낮으므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분야의 AI 대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AI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산만한 감이 있는 점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AI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분야 중에 공공의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이게 국제적으로도 AI를 접목하는 데 선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최대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집행 가능한 부분을 따져서 예산을, 솔루션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계와,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저희가 수요 부처로부터 확보하고 분석하고 가공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내년도에 출발하기 전에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가공 분석에 들어가는 연내 집행 가능한 몫이라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지금 추경이 민생을 중점적으로 했잖아요. 그동안에 공공AX 프로젝트 이것은 속도 조절을 해도 저는 민생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은 돈이 있고 이렇게 하면 바로 집행을 하는 거지요. 지금 돈이 없잖아요. 빚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한 사업을 조금 늦추고…… 해 봤자 6개월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차관님? 이것을 이번에는 넘어가고, 삭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본예산으로……

○김대식 위원 부처 이기주의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국가의 틀을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이 예산은 저희 과기정통부가 주관입니다만 적용하는 부처들은 다수, 범부처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생과 직접적인 말씀을 하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좀 아쉬운 건 AI가 굉장히 속도전이고 규모 전쟁인데 저희가 너무 지금 뒤처지고 규모 면에서 열악해서 좀 시급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절반 정도 예산이라도 저희한테 주시면 나머지는 다음 본예산으로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하더라도…… 안 그렇게 되면 또 6개월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나 의료서비스 같은 경쟁이 치열

하게 일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빨리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300억을 요구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한 10분의 1, 한 30억 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270억 삭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면밀히 따져서……

○김대식 위원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면밀히 따져서 저희 실무진들은 한 150억 정도만 해 주시면 연내 반드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100억 합시다, 100억.

○조정훈 위원 뭘 100억을 해, 이것을. 말이 돼?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그 액수까지 저희들이 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것 포함……

○박형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하세요.

○박형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부처에서도 어느 정도 삭감하는 것을 수용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30억 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적은 것 같고 한 100억이나 50억 정도 해서 일부 조금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런데 차관님, 여기 자료에 보면 최소 60개의 과제를 지금 시행할 계획인데……

○조정훈 위원 20개라고 돼 있는데요.

○임미애 위원 20개요? 20개.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절반 정도 주면 거기서 선별해 가지고 나머지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들 생각은 과제를 선별하는 것보다 규모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하는 것을 앞단에서 데이터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단가로 해서 그 단가를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차관님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장관님 못 알아보다가 혼나 가지고, 어제.

이게 과연 민생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민생 추경이잖아요. 과기정통부차관이라는 직을 벗어 놓고 나면 이게 민생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꼭 관련이 있다 할 수는 없지요? 국가 미래 신성장 산업 이런,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왕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시작하고, 보니까 과제당 15억씩 20개 나누어 주고 300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숫자를 좀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워낙 이게 보니까 기재부에서 발표한 아주 몇 장짜리에도 나올 정도로 AX 전

환 이렇게 막 크게 쓰셨던데, 그만큼 소위 상징적이고 플래그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20개 하든 10개 하든 5개 하든 상징적으로 시작하는 거고 결과 보고 좋은 결과가 나면 내년에 수백 개 올리셔도 되는 거니까 숫자를 좀 많이 줄이지요. 그래서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민생 관련해서 저희는 이게 각 분야 지금 복지부 또 농림부 다양한 분야에서 이 AX를 통해서 접목하는 것이 곧 서비스를, 그 해당 부처들이 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한테 어떤 AI를 활용한 혜택을 드릴까를 검증하면서……

○조정훈 위원 차관님, 진짜로 민생이 뭔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마디하는 거세요?

○이소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소영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차관님께서도 300억을 요청했고 수요조사상 그런 수요가 충분히 공공 내에 있다고 하는 건데도 절반 정도로 줄여서 일단 시작을 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150억을 삭감해서 절반 정도로 배정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실 이 개별 사업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10%다, 20%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처가 어쨌든 먼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좀 존중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조정훈 위원 좋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소위원장 한병도 그렇게 하세요.

○조정훈 위원 첫 번째 저희가 증액 인정하는 거니까……

○김대식 위원 30억 원과 150억……

○박형수 위원 30억과 150억이니까 200억 깎고 100억으로 남겨 둡시다.

○김대식 위원 100억.

○이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약간 시장 흥정하듯이 예산을 처리한다는 게……

○박형수 위원 그러면 양쪽 마찬가지로. 30억도 정확한 근거 데이터가 없고 150억도 정확한 근거 데이터가 없잖아요.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부처의 근거……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다 보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보다는 부처에서도 150억 정도를 얘기했잖아, 절반 정도 얘기했으니깐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깎아서 한 100억 정도를 부처에 주고 나머지 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소영 위원 아니, 부처에서 ‘그냥 절반만 주세요’ 이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런 건 아닙니다.

○이소영 위원 150억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논리를 알고 싶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연내까지 저희가 집행 가능성, 원래는 저희가 20개 과제에 대해서 데이터 가공 확보하고 또 분석, 실제로 모델을 개발하는 서비스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를 내년 한 3월 정도로 목표를 했었는데요.

○**김대식 위원**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밤새도록 다 못 하겠는데.

○**임미애 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공공AX 사업들에 평균 12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거든요.

○**조정훈 위원** 15억.

○**임미애 위원** 12억.

○**조정훈 위원** 20개라 그랬으니까.

○**임미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공공AX 사업들이 1년간 평균 12억 원 수준으로 과제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것 단가를 조정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임미애 위원** 그렇게 해서 과제 개수 조금 줄이고 단가를 12억 정도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액에 대한 부처 의견도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의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이 취지를 살려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정리는 됐는데 얼마 넣고 얼마 넣고를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서 이 내용은 취지를 살려서 다음 논의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부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예,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소위원장 한병도** 공공AX 프로젝트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야 일주일 동안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금 엑기스로 해서 하시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소영 위원** 여야 한 분씩만 일단 말씀하는 걸 기본으로 하면 어떨까요?

○**박형수 위원** 그렇시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사합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방금 것은 어쨌든 금액만 조금 더 확인해 보고 감액하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어서 27페이지 4번 사업 의료 AI 혁신생태계 조성(닥터앤서 3.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AI 기반의 예후관리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AI 예후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성과 검증도 없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국민 건강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를 접목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서비스로, 응용 분야로 가장 경쟁을 하고 있는 분야가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공공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닥터앤서 3.0이라고 하는데 1.0, 2.0 사업을 저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1.0, 2.0은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분들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개발한 AI 솔루션인데요.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수출이 되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과는 수출 협의를 하고 있을 정도로 닥터앤서 사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나 사업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저희가 1·2단계의 그런 성과를 연계해서 이제는 진단과 치료가 아니라 치료가 끝난 환자들의 예후관리를 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의료 분야에 대한 AI 접목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고 그런 포텐셜이 굉장히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예산을 살려 주시면 저희가 3.0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기부 예산은 큰 틀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민생회복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신산업 분야 투자 이쪽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부처의 특성상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생에 대해서 그렇게 따끔하게 질문한 거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왜냐하면 국회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저희는 이것이 민생 추경이기 때문에 22조 이상의 국채를 내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 동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기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필요 없는 사업이 없다는 것 동의하는데 본 사업도 아까 좀 길게 논의한 공공AX 프로젝트처럼 우리나라에 AI 기반의 의료 서비스를 만들고 또 이제 단지 병을 알아내고 수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후, 수술 이후에 이 환자가 어떻게 또는 이 질병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만들겠다, 되게 좋고 의료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게 본예산이라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추경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 본예산보다 더, 한 두세 배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본예산에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23억입니다.

○조정훈 위원 23억이 있는데 지금 80억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거는 지금 추경의 목적, 민생경기 부양에……

연구예산이지요, 이 예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솔루션 개발하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개발 예산이 짱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개발자들에게 돈 줘서 개발시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의료기관들이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입니다. 성모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또 그런……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돈을 줘서 솔루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연구의사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민생경기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추경예산 23억의 거의 3배 이상, 거의 4배 가까운 예산을 추경에 태울 정도로 긴급성과 시급성이 있는지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아까 AX 프로젝트를 해서 부처에 나눠 줘 가지고 내년 예산을 하기 위한 마중물로 쓴다 이게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공감이 되지 수술 이후의 예후관리를 위해서 80억을 더 써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자, 이거는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해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 이 프로젝트 본예산에 있지요? 본예산에 1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안도걸 위원 시범적으로 이것을 해 보겠다는 건데 지금 추경으로 2건을 더 하겠다, 그 절박한 사유가 뭐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본예산으로는 세 가지 질병 분야에 대해서 1개 컨소시엄을 하는 예산이 23억입니다. 저희가 80억을 요구드리는 것은 2개 컨소시엄을 가지고 8대 질병 중에 5개 질병, 본예산에 반영된 세 가지 질병이 아니라 5개 질병에 대한 것들을 해 보고 싶은 건데요.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급성과 관련돼서 저희가 경쟁의 현장에서 보면 답시크나 이런 게 나오면 얼마 안 돼서 서비스하려고 하는 중국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스타트업들이 의료 분야, 공공 분야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막 생기기 때문에……

○안도걸 위원 알겠는데 왜 그런데 본예산에는, 시범적으로 하나만 해 보자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가 들어갔는데 추경에서 왜 2개를 더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상당히 피 튀기게 경쟁을 해 가지고 누군가가 선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개가 쑥 들어가면, 그렇지요? 또 쉽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되 사업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시범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엄정한 경쟁을 통해서 된 데가 뭔가 열심히 하고 결과가 좀 나오고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확산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 관련해 가지고 의료기관들의 수요조사를 했더니 경쟁률이 4 대 1입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래서 굉장히 의료 현장……

○안도걸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때 2개를 따야지 왜 그때는 못 따고 지금 여기 추경에서 그것을 쉽게 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컨소시엄을 추가로 2개를 저희가……

○박형수 위원 기재부 공무원 입장 대변하는 것 같아요.

○안도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임미애 위원 그전에 본예산 올릴 때 애초에 1건으로 올렸었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2개, 3개 올렸는데 1건만 사업비가 반영된 거라면 저희가 다시 고려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질병도 5개 질병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의미는 있는 건데……

원래 본예산에 1건만 반영을 시켰던 건가요, 애초에 올릴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예산 제약상 컨소시엄 1개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개가 아니었는데 반영시킬 때 1개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5개 질병에 2개 컨소시엄으로 해서 추가를 하고자 지금 요청드린 건데 1개 컨소시엄이라도 할 수 있게 추가해 주시면…… 40억 2개 컨소시엄을 요청드리는데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저는…… 잠깐만요. 사실 애초에 3개 질환에 대해서만 이게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추가되는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재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토론 과정에서 생산적인 내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부처도 또 다른 의견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심사 때 이것 포함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AI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했다가 4시에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8페이지, 5번 AI 혁신펀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AI 특화펀드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 AI 기업을 육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일반회계에 중복 편성하였고 펀드사업 특성상 연내 실제 투자가 불가능해 보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국가대표 AI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2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AI 말씀드리게 되지만 저희가 본예산과 1차 추경에서는 정진기금으로 펀드 조성을 100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하게 된 건 지금 정진기금의 재원 사정상 재원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펀드 문제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국내 AI 민간 투자는 13.3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미국은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한 90·1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벤처기업들이나 AI 기업들한테 흘러가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너무 규모가 작아서 이 혁신펀드도 또 시급히 추경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부 출자로 신속하게 투자를 건인할 필요가 있어서 또 급히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것 AI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런 기본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에서 정진기금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지금 이번 AI 혁신펀드 1000억 원을 신규 편성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정진기금으로 본예산에 2차 추경……

○김대식 위원 그런데 정진기금에 유사 목적으로 지난번에 450억이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예산에서 작년 연말에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통행을 하는 바람에 이게 다 빠져서 오히려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고 그리고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구하는 추경 취지에 이게 맞느냐. 나는 이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민생 추경이고 빚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빨리 지급을 하고 싶어요. 국민의힘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싶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재정건전성 따지고 이래서 돈 다 모아 놓으니까 민주당에서 팍팍 쓰고…… 우리는 왜 그것을 못 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민간자본 매칭 그다음에 운용사 선정, 이게 상당한 절차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실투자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1000억을 추가 편성한다,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이번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잉 편성의 우려가 있다.

○**임미애 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도 잠깐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대한민국이 AI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AI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시급한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하루빨리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은 요구대로 전액 반영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AI 혁신펀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9페이지, 6번 AI 기반 침해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침해 사고 대응 전 단계에 생성형 AI를 도입하여 신속·정확한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시급성이 낮은 장기 인프라 구축 사업이고 예산의 대규모 이월이 예상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고도화되는 침해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2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AI 기반 침해 대응체계 구축 사업도 최근에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전후로 해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해킹 사고가 연간 한 1800건 정도, 해가 갈수록 침해 사고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대규모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K텔레콤 조사를 두 달 넘게 해 보고 있는데요, 신고부터 해서 원인 분석하는데 포렌식 이런 과정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들의 소요가 들어가서 AI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두 달 내지 세 달 걸리는 그런 침해대응, 분석·대응까지 한 10일 내에 완료할 수 있는,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신속한 대응체계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또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프라이버시나 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고들의 빈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들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말씀하실 때 아까 SK 해킹 사고 관련해서 SK가 아직도 지금 재발 방지 및 대책 수립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하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조사 저희가 해 보니까 두 달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SK는 자체 조사 안 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것은 저희가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SKT의 문제된 서버들을 카피해서 포렌식 작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SK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수사기관하고 수사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좀……

○**조정훈 위원** 저희가 이것 봤더니, 지금 50억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50억 원 침해대응, AI 시스템 설계하는 데 지금 8억 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10억 원입니다.

○조정훈 위원 8억 원이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침해대응 시스템 설계에 10억 원이고 인프라 구축 및 실증에 40억 원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구입, 인프라 구축에 40억 원 그래서 50억 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의 기간이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총 400억 정도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4년 동안…… 지금 긴급하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 같은데 민생경기 회복, 빛내서 하는 추경에 4년짜리 장기 프로젝트 그리고 저희가 판단한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이미 7월이고 이걸 사업에 착수하더라도 선급금 정도만 지급하고 이 50억을 아마 내년으로 이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저희가 잘못 본 겁니까? 50억 다 집행할 걸 확신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50억은 저희가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청 드리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이것 집행 안 되면 책임질 수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저희가 계산을, 집행 가능한 그런 소요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 봤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가능성은 저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게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지금 보니까 이번에 해 드리면 지금 50억, 내년에 250억, 3차 연도 60억, 4차 연도 40억 들어간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지금 저희가 50억을 동의해 주면 실질적으로 중간에 50억을 태우지 않는 한 350억 이상의 예산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겠지요? 본예산 내년에 받으실 때 ‘추경에서 50억 뺐는데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나머지 또 줘야 됩니다’ 이러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450억짜리 예산의 50억을 시작하자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이건 추경으로 시작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긴급성도 그렇고 예산의 원칙과 성격상 이렇게 다년간 되는 예산을 50억을 빚을 내서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추후 3년 동안 300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건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생회복 예산으로 적절하지도 않고 이렇게 4년……

차관님, 우리 추경 할 때 이렇게 400억, 500억 중의 일부를 추경으로 넣고 나머지 해를

약속하고, 집행을 이렇게 장기간 하는 사업을 추경으로 하는 게 적절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안 침해하고 관련해서 현장에서 그런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그런 침해 위험이 더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시급한 건 맞고요.

그리고 또 이게 28년까지 다 구축되어야 효과가 날 텐데 지금부터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28년까지 돈을 다 넣어야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개통해서 개통한 범위 내에서 효과가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AI 기반 침해 대응체계 구축 사업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7번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사이버공격 탐지 대응체계 운영 사업은 DDoS 사이버대피소 및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노후 장비를 교체하려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임에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추경의 긴급성과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90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보안시스템 개선을 위해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DDoS라고 하면 최근에 우리 주요 정당들 홈페이지도 마비시키는 그런 공격입니다.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유발해서 정당이나 정부기관이나 회사들의 홈페이지가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도록 하는 것들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런 기관들을 사이버대피소로 트래픽을 우회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DDoS 대피소 또 그리고 이걸 감시하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가 송파하고 나주에서 24시간 계속 전국을 감시하고 있는데요. 이 장비들의 내용연수가 보통 5년으로 되어 있는데 15년 정도 경과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사이버 공격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시스템들을 빨리 좀 교체를 해야지만 하는 그런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게 굉장히 많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불편을 끼쳐 드리고 또 실질적인 피해까지 이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시스템은 좀 시급히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국민의힘 위원이나 민주당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국가예산을 누가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 걱정하고 또 필요할 때는 적재적소에 써야지요. 써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도 삭감하기 싫어요. 그냥 부처별로 해주라 하면, 기재부차관님 여기 와 계시지만 ‘돈 지장 없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게 삭감하지 않으면 증액은 순수 증액으로…… 지금 절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보십시오.

DDoS 대응 시스템, 차관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90억 원을 딱 보니까 2010년부터 16년까지 도입된 장비를 교체하는 거예요, 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거는 충분하게 보완하고 정기적인 정비를 거쳐서 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건데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꼭 여기에, 추경에 이걸 넣어야 되느냐. 이걸 반대한다는 걸 봐도……

그래서 이것은 즉각적인 보안 위협 대응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래서 이 90억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좀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노후 장비이기는 한데 사고의 위험성이라는 것이 그전에 이쪽에서 사고가 좀 발생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실제로 다운된 적도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많은가요, 그런 횟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실제 다운이 되면 저희가 24시간 전 트래픽들을, 전국 트래픽을 감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의 방어체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면 된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런 장비가 그게 가능한가요?

○김대식 위원 지금 5년밖에 안 됐어요. 이 장비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임미애 위원 아니, 아까 2010년에서 2016년도에 도입된 장비를……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임미애 위원 교체하는 거니까 10년이 넘었지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15년 된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15년 정도 돼도……

제가 대학총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년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래서 이것을 시급성을 따지면…… 우리도 해 주고 싶다니까. 정말로 해 주고 싶어요.

차관님, 돈 있으면 해 주세요. 기재부차관님, 돈 있으면 해 주세요. 이게 삭감이 안 되면 증액을 순수 증액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거 하겠어요? 아니, ‘해 주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넣으면 되지 않겠는가, 90억 정도니까.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시급하게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0억 전액을 그대로 둘지 아니면 전액을 삭감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급성을 따져서 이것도 보류로 넘겨서 다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 불찰인 것 같아 가지고요, 이거는. 사실은 내용연수가 5년인데 지금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 가지고 이거 10년, 15년 쓰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거 포함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어서 51페이지는 철회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감액사업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AI·디지털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AI·디지털 보편교육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과 사업 내용이 중복되고 추경의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추경안 증액분 65억 8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기존 사업과 중복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의 디지털배움터라고 전국 1000여 개소의 교육장을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점센터 중심으로 해서 37개로 줄이고 상시교육 체제로 바꿨는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에 스마트폰 활용이나 키오스크 활용이나 이런 교육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AI 디지털배움터라고 새롭게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AI를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 디지털 취약계층의 그런 AI 리터러시가 지금 많이 현저하게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새로운 AI 기본역량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완전히 기존의 디지털배움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이는 전 국민들이 AI의 그런 보편역량을 갖춰서 AI 시대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은 곧 민생하고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이게 지금 65억 요청하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65억 중에 거의 대부분 한 63억·62억은 32개소의 AI 디지털배움터를 구축하겠다는 예산이고 6000만 원, 2억은 콘텐츠 개발인 거네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제 한 개소당 1억 9600만 원 정도 책정하셨는데 이게 뭘니까? 임대료입니까? 시설비입니까, 뭘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건물을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주요 거점 우체국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공간은 저희가 확보를 해 났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는 예산들이고요. 바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까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32개소는 어디, 어느 지역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전국 17개 시도를 두 곳씩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하고 세종권은 규모 면에서 한 곳씩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좀 조정을 한 겁니다.

○조정훈 위원 우체국 빈 데다가 이걸 해 가지고 AI 디지털배움터를 만들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AI 경험하고 AI 교육시키겠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나이 드신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 청소년들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청소년들이 AI를 우리한테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이 더 잘 알지. 선생님보다 학생이 더 잘하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과연 이게 추경의 시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으로까지는 제가 백번 양보해 드릴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과기부에서 만든 AI 디지털배움터에 가서 AI를 배운다라는 그 가설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요. 관심 있으면 자기가 컴퓨터 앞에서, TV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배우지 이걸 우체국 유희공간에 가 가지고……

무슨 센터 운영하고 그러면 사람 상근시켜야 되는 거지요? 인건비도 들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상주 교육장으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이나 교육시킬 생각을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저희가 지금 디지털배움터를 운영을 했을 때도 전국적으로 한 50만 명가량,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정들이나 이런……

○조정훈 위원 아니, AI 디지털배움 다 좋은데 그냥 짧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민생 추경, 국채를 발행하는 부채 추경에 우리가 65억으로 디지털배움터를 만들어서 AI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쓰겠다라고 하면 거기 달릴 댕글이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건 저희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삭감을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이거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배우지요, 이것? 인건비가 나중에 들어오나요? 시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올해는 시설 다 하고 콘텐츠 개발 비용으로만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한 번만 끼어들면……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거 추경해 드리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유지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인건비 드리고, 사업비 드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시설 임대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

○조정훈 위원 인건비 드리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추경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사업을 넣으시면 안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디지털배움터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찾아 오십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6개월 하고 문 닫을 텐트도 아니고 하면 몇 년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어떻게 추경으로 슬쩍 이렇게 넣어서 시작하세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그러면 내년에 과기부 예산에 이것 안 다루면 6개월 동안 65억 넣은 거 다 문 닫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추경에 쏙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빚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디지털배움터에도…… 우체국이나 주민센터의 그런 공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지만 한 300만 명 이상이 몇 년 간에 찾아오셔서 그런 교육을 받으십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디지털배움터에다가 AI를 그냥 또 장착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디지털·AI 빼고 뭐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 수요들을 저희가, AI에 대해서 지금 너무 일반적으로 쓰고 계시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취약계층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잠깐만요, 이것 지금 여당 위원님들은 삭감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의견도 표명 안 하셨는데 그냥 보류합니까?

그리고 잠깐만 제가 마이크 켜 김에 정부 측에다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다 대답을 하면 그러면 정부 측하고 위원님들하고 계속해서 토론하다가 이게 끝나요. 정부 측 의견을 처음 제시를 했으면 묻기 전에는 원래 답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저도 조정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문제 의식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전 국민에 대한 AI 교육 사업이 초점인지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인지가, 사업 성격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어쨌든 최근에 올해 딥시크 등장 이후에 AI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서 엄청난 화두가 되고 있고 거의 매일매일 하나씩 응용형 AI앱이나 웹사이트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요새 국민들이 동영상도 직접 보지 않고 다 릴리스 AI에 넣어 가지고 요약해서 보는 게 불과 최근 한 반년 사이에 변화된 상황이어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혹시 이러한 변화에 소외되거나 도태되거나 하는 국민들이 없는지는 살펴서 교육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체 사업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좀 불필요한 부분이 섞여 있는 건지는 저도 조금 더 자세히 자료를 받아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정훈 위원님 문제 제기에 저도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전액을 삭감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 아까 청소년 얘기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지, 학교에서 하고 있는 AI교육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거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학교에서 그걸 배우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위원님, 두 위원님 의견 포함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과기부는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통일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입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오대석 통일부 기조실장 오대석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69페이지입니다.

통일부는 감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북한 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봐 주십시오.

2025년도에 신규 편성된 내내역사업으로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특정인의 도서가 포함되어 있는바 도서 구입 및 배포에 편성된 일반수용비 2억 6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 상임위가 됩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 요청……

○소위원장 한병도 외통위.

○조정훈 위원 아, 외통위에서.

진행하시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없어요?

○이소영 위원 이것은 상임위 감액이니까 동의하고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통일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북한 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관련된 사업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끝났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통일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차관 이두희입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국방부 기조실장 이영빈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75페이지입니다.

국방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2건,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1번과 2번 사업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통신요금 사업의 내역사업인 안보폰 통신요금에 대해 1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2번 사업인 정보보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안보폰 탑재 암호장비 사업에서 11억 1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감액 사유로서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에게 지급되는 안보폰 수량이 과도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희 국방부는 이 감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통신요금과 정보보호 사업, 이 2건에 대해서는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방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

○이소영 위원 아니요, 하나…… 3번.

○김대식 위원 아니요, 하나 있습니다. 3번 관사 및 간부숙소.

○소위원장 한병도 하나 더 있구나.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76페이지입니다. 3번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51사단 168연대 간부숙소 신축 사업에 대해 대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관련 예산 4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결이 있었고, 반면에 안정적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증액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추경 감액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그린벨트 등 대관 협의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감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방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눈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입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자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2건과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15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일단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국가가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도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지금 참사 특별법은 제정되었으나 법적 책임 유무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형이 맞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피해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게 조사와는 관계……

○**조정훈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국가의 법적 책임 유무에 대한 조사는 지금 진행형이라는 게 맞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일단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냐, 어떤 과실이냐가 되면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조정훈 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조사와 그 조사 결과에 따른 보상·배상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보니까…… 세월호 등 과거 사례에서도 사고 조사 그다음에 책임 소재 판단이 마무리된 뒤에 보상 및 구상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잘못 안 겁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것은 별도의 근거, 생활지원금과 고용·휴직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조정훈 위원** 아니, 세월호의 경우에는 조사와 책임 소재 판단 이후에 보상 및 구상 절차가 진행된 게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세월호의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조사가 8월 달부터 16년 9월 달까지 진행이 됐고요. 생활지원금은 15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원됐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지원됐다 이것은 팩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지원금 말고 보상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보상금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생활지원금과 고용·휴직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지금 금액이 얼마지요, 요청하신 게? 15억이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15억의 내용을 보면 생활지원금이 한 8억이고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생활지원금이 8억 9000만 원입니다.

○조정훈 위원 예, 그다음에 치유휴직……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고용유지비용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조정훈 위원 3억 5000이고 추모행사가 3억, 이 정도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큰 틀에서는 동의가 되는데 다른 사례들, 바라건대 이태원 참사가 정말 대형 참사의 마지막이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거 세월호 등의 사고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여러 가지로 선지원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목들을 하나 보고 과거의 사례와 법적으로 심의·조사와 관계없는 지원 예산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 예를 들어서 추모행사 3억 이것은 문제없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생활지원금의 지원 순서, 시점 이런 것들이 과거의 대형 참사, 국가의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되는 참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과거 사례도 있다 하면 지원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사례를 만드는 거다 그러면 여야 간에 좀 더 합의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것은 제가 짧게 말씀 나누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게 법정 예산으로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 여야 합의로 반대 한 명도 없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시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 올해 초에 마련이 됐고 그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난 5월 27일 날 피해자의 범위나 지원금 단가 같은 게 정해져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생활지원금이나 지금 여기 담겨 있는 치유휴직에 대한 고용지원금 같은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어서 이게 법과 시행령과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훈 위원 확인을 저희가 하고……

○이소영 위원 예, 그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그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보류해 놓고 확인하고……

○소위원장 한병도 예,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4페이지, 2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 기념사업회에 사업비·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행사성·기획성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추경안 편성 요건인 긴급성·시급성 등과 무관하므로 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본 사업은 민주주의 가치 고양 및 국민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므로 정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이 작년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액 삭감은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됐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사업비 일부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추경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는 것은 차관님 인정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다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말 계엄 사태 같은 것도 시민들,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산 그리고 또 지난 6월 10일 날 민주화운동기념관이 개관을 했는데 그때 여야 대표님들, 당대표님들도 다 오셔서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담게 됐고요. 또 올해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식이 열려서 같이 보조를 맞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맙습니다.

○김대식 위원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지금 이 추경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봐서도 한번 생각해 볼 겨를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강력하게 반대할 수도 없고 또 찬성할 수도 없고 추경과 맞냐 맞지 않느냐…… 참 좋아요, 사업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이 재해 대응이라든지 민생 안정이라든지 긴급성과 시급성에 요구되는 분야에 또 이게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정부가 바뀌었을 때마다, 박근혜정부·문재인 정부·윤석열 정부마다 그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민주화운동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연구용역을 꼭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또 새로운 가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민주화사업을 끌고 갈 건지.

더군다나 원래 본부는 의왕에 있고 민주공원은 이천에 이렇게 두 군데 있었는데 올해는 기념관까지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군데 사업장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런 부분

이 좀 필요해서 경영전략 기획 예산이 급하게 들어오게 된 거고요.

시민 참여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반대, 부정 의견을 주시면 조금 조정·감액 같은 것은 저희가 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조정 가능합니까? 그러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일부 금액 정도……

○김대식 위원 ‘일부 금액’ 그러면 한 5억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5억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으로 조정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1억 삭감하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것은……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 안 합니다.

○김대식 위원 예, 1억 삭감, 어떻습니까?

○조정훈 위원 간사님은……

○소위원장 한병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은 5억 원으로……

○김대식 위원 아니,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박형수 위원 보류합시다.

○김대식 위원 보류?

○박형수 위원 다 두든지 해야지 1억 깎는 것은 뭘니까?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었나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사실은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재작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 그 단체들이 일부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에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데 반정부 그러니까 정부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나 해서 일반적인 사업이 많이 특정감사를 받아서 삭감됐었는데 지금 들어온 사업은 그 삭감된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게 반영된 겁니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임미애 위원 그러네요. 반영 내용을 보니까 전체 5개의 사업 꼭지에 사업비가 다 들어와 있는데요. 일부 감액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 보류해서 사업비 조정을 해 보는 방향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의견들을 줬는데요. 이것도 보류해서 좁혀지는 것 포함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들, 1억 이상 감액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들 질의하시면 답해 주시고요. 이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같은 페이지 3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방식에 따른 부대비용 과다 등 사업의 효율성 문제 및 예산 낭비 등을 우려하여 전액 삼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정교한 가이드라인 마련 후 본예산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업 구

조상 지자체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반면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 70~80%를 전액 국비로 전환하기 위해 2조 9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추가 지원을 위해 1조 999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의 핵심 사업입니다.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소비진작, 경기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어제 종합질의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요. 비수도권 지역, 특히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20% 정도의 지방부담금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를 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경우는 훨씬 더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왕 이 예산을 논의한다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증액을 논의하는 것이 우리 예결소위의 타당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이걸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가장 큰 핵심이고 10조가 넘는 사업이고, 30조 추경에. 어제 행안위에서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을 통과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조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이 얼마로 추정되니까?

○임미애 위원 2조 9000억이……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3조가 더 되니까 이게 13조 예산이 되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지금 10조 3000억인데요 지방 부담이 2조 9000억가량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거의 3조가 추가로 되는 거고 저희가 여기서 1억, 3억 깎아 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 2조 9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게 맞지요, 기재부차관님?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마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추가 국채 발행이 3조가 늘어나면, 지금 22.3조에서 2조 9000을 원하면 25조의 국채 발행이 됩니다. 저는 이게 큰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부담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역선택, 역차별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아까 우리가 보류했던 예산들, 실은 추경적 성격, 이것은 민생회복, 백번 양보해서 민생회복이라고 볼 수 있으니 그런 예산들을 진짜 다 깎고 깎고 깎고 깎았는데도 2조 9000억 원의 추가 부담에 모자라다고 그러면 그 차액을 국채로 발행하자까지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디지털센터 만들어 주고 의료 뭐 하고 뭐 하고 했는데, 2조 9000도 오롯이 다

국채 발행에 얹자 이것은 저는 무책임한,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무책임한 예산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능성을, 이것은 남기셔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지방재정 부담 없이 전액 국고로 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 사업 예산을 다 삭감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좀 여쭙보면 이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비가 15억 있네요, 이 사업에? 그게 지금 앱 개발하고 이런 것 다 필요한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또 많은 부대비용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부대비용에 한 260억 정도가 들어 있는데 민생회복 쿠폰발행 부대비용 이게 뭡니까? 이게 260억 맞지요, 256억?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257억가량이 어떻게 보면 발행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지만 쿠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난 민생지원금 20년, 21년도처럼 자기 신용카드로 받아서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로 나오는 지류형 그다음에 모바일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지역사랑상품권도 또 카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크카드, 선불카드 이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그것은 지금 수단을 어떻게 할 건지를 다 선정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개인이 어떤 것을 활용할지를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봤을 때 전체 발행비용의 약 0.3% 정도로 추산을 해서 발행비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 20년도에는 1~1.4%가 됐습니다. 20년도는 그랬고 21년도는 0.14%였는데 0.3%거든요, 이번에. 그 이유는 과거에는 가구 단위로 했었습니다,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게. 그런데 지금은 개개인, 미성년자를 제외한 개인이 신청해서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5111만 명, 물론 아이들은 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발급 발행비용이 늘어나게 됐고요.

또 한 4~5년 동안 사실 우리 물가 수준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스템 구축 또 원활하게 국민들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발행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코로나 이후에 재난지원금 줄 때 이런 것 한번 다 개발하고 시스템만 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때도 만들기는 했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때 건 어찌고 또 다 사고 또 다 장비 임차하고 홍보비, 홍보비야 어쩔 수 없다 치는데 시스템 DB 구축, 암호화 연계 솔루션, 그때 다 한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계속 유지된 게 아니고요.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다 보니까……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일회용 비용이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현재는 그런데……

○조정훈 위원 미래엔가 언젠가 한번 또 쓴다고 그러면 이 부대비용이 그대로 더 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내년에 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조정훈 위원** 그럴 일 없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게 되면 아마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일회용 비용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한병도**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것이 사실 이번 추경의 핵심입니다. 저희들이, 감액 의견을 낸 위원님들이 민생이 어려운 상황을 몰라서 감액 의견을 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감액 의견을 낸 이유는 기왕에 재정을 이렇게 투입해서 쓸 바에는 효율성 높게 효과 있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정부가 이전 지출을 했을 때의 승수효과, 직접 소비하거나 구매했을 때의 그 효과 그다음에 SOC에 투자했을 때 효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승수효과가 매우 낮다 그런 취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지급을 하더라도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을 하는 것이 소비진작 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전 국민에게 15만 원 일 단 기본으로 주고, 그다음에 일부 차등은 합시다마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 예산에 대한 삭감 의견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다 삭감한다든지 또는 지방비 매칭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자치단체의 사정을 감안해서 그걸 전액 국비로 한다 그러면서 그 비용을 증가시킨다, 추경예산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국채를 더 내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은 여야 공통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지방비 비용을 없애 주기 위해서 전체 비용을, 국고채 비용을, 부채를 더 늘린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양쪽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종합질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구소멸지수가 높은 지역, 어려운 농어촌 지역 또는 특별한 재난을 당한 지역 이런 곳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없애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 재원 역시도 이 자체 사업에서 감액하거나 조정하거나 해서 마련해야 되지 추가로 국채를 더 발행한다든지 추경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 국민 15만 원 주는 부분을 상위 30%는 안 준다든지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방의 어려운 지역에다가 매칭하는 비용을 준다든지 또는 산불로 인한 어려운 지역 또는 인구소멸지수가 굉장히 높은 지역 이런 곳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한다는 지 또는 지역, 지방재정의 형편을 봐서 하위 10%, 20% 이런 자치단체에 지방비 매칭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기재부와 또 여야 간사 간에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는 거지요,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박형수 위원 지급하는 건 지금 현재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한병도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우리가 왜 지급을 하느냐, 그리고 이왕에 지급할 바에는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왜 우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금 지급해야 되느냐, 그게 최선의 방법이나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소득 이전지출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현금을 국민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한테 많이 집중해 드리고 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선별 지원이 맞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전 국민적으로 지금 소비를 진작시키자, 지금 경제가 내수가 완전히 꺼져 가지고 0%대의 성장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살리자. 그런데 소비를, 그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소상공인.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600만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증대로 높여 주자라고 해서 경기도 살리고 또 서민경제도 살리자,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게 바로 전 국민한테 다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 금년 내에 소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보편 지원이 맞는 겁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지금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등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지방에서 지방비 분담을 2.9조, 그렇지요? 수도권은 지금 서울이 30 그리고 지방은 20%지요. 그런데 이게 22.9조란 말이에요. 3조란 말이에요. 만약에 3조를, 지방이 어떻게 조달할 것 같습니까, 이 재원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보통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교부세 아직 안 쓴 부분, 그다음에 보통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지역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필요한 지방에 매칭된 금액이 지금 현재 가용자원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약 49개 시군 정도가 좀 부족하고 나머지는 쥐어짜 내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기재부에서 공적자금 1조 원을 저리로 3% 미만 2.8% 정도의 이율로 빌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재정법을 조금 개정을 해서 지방채 발행을 편리하게 해 준다고 그러면 어렵긴 하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기타 어려운 건 행안부가 또 컨설팅과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데 쥐어짤다고 하셨는데 지방도 지금 다 이미 쥐어짜여 있어요. 지금 마른 수건 짜내기인데, 그래서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그리고 대부분 재정이 취약한 곳은 아마 지방채를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거든요. 왜 그러면 2.9조를 국채로 지금 바꿔 주자라고 하나면 어차피 지방이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재원이 없단 말이지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지방채를 늘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채를 늘릴 거냐 국채를 늘릴 거냐 이 문제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러면 누가 더 국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겠느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조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정 부담이 되고 지방채로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부분을 지방채를 늘리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국채에서 이왕에 늘린 걸 더 늘리는 이런 방안, 둘 중에서 어떤 게 좋겠느냐는 게 지금 저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지방이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 그리고 지방채 증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정확히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컨대는 서울이라든가 경기, 인천, 수도권 빼고는 지방에 있는 지자체는 대부분 아마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배분 기준 또 국비-지방비 비율 문제 또 지방과 수도권의 문제, 여러 쟁점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거 포함……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사실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는 일단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대개 좋아하는 정책이고요 단체장들이 반대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제도 종합정책질의에서 위원님들이 주셔서 저희가 오늘 아침까지 다 업무 연락으로 확인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잠깐만요. 지금 차관님 하신 말씀은요 이미 어제, 오늘 다 하신 말씀들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똑같은 반복이거든요.

○이소영 위원 나중에 추가로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보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 감·증액 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저조하므로 6000억 감액이 필요하고,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가이드라인 설정 후 본예산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1차 추경액의 실집행 실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6000억 증액 편성이 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마찬가지로 민생경제 조기 회복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

점이기 때문이에요 소비진작이라든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또 이게 다른 추정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이 문제는 또 여야 위원들의 갑론을박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있잖아요, 업종에 제한을 두고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안부 차원에서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맞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매출 30억 이하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행안부는 일부 지자체에 조례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전체 제도의 통일성과 정책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유류보조금과 중복되는 주유소라든지 병원 등은 소상공인에 직접 지원 효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결제액이 집중되고 있다 이거 지금 파악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행안부는 금년 추경을 통해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8.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제도개선이 없어요. 굉장히 부족해요. 이게 지금 현실하고, 우리는 지역구 국회의원 이잖아요. 나가서 돌아보면 정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지역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지원하고…… 당연히 그렇게 발행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괴리감이 있어요. 괴리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데 왜 지금까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업종 제한 없이 매출 30억 이하 업체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놔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무제한이라는 것은…… 개인 보유 한도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매출 30억 이하의 업체에서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놔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30억은……

○임미애 위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은 거지요, 무제한이 아니고.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보통 그게 소수……

○김대식 위원 지금 꼭 여기서 이야기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돼 가지고 나중에 합동으로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중간에 깎을 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해서 행안부에서 이런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여야 국회의원들 직접 한번 현장에, 필드에 뛰어 보면 이걸 느낄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이게 지방사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전담 이렇게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예산도 본 예산에 반영한 적이 없고 추경에서 들어왔던 건데요. 위원님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정부 조직되고 이러면 직제에서 이것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잘 챙기도록 하고요.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왜 그동안에 기구를 안 만들었냐고요. 다 이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굉장히 제한이 있는 효과밖에 발생할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 유흥주점이라든지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한되어 있고요, 일단. 그다음에 30억 원은 뭐냐 하면 우리 소상공인 지원 법상에 5인 이하, 30억 이하의 매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 소상공인으로 타격을 해서 지원되는 상품권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대식 위원** 그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우문현답입니다. 매주 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석구석, 전국의 소상공인들, 재래시장 이런 걸 구석구석 다니면서 했는데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걸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어제 행안위 위원님들도 그걸 강조하셨거든요. 부정 유통이라든지 깡 이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하라 그래서 시도, 시군구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찾아내도록, 그런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역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저희가 정말 책임지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사무여서 사실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되는 데 뭔가 지원을 해 주는 적이, 행안부 차원에서는 예산 편성해 본 적 없지 않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전에는 있었는데요.

○**임미애 위원** 언제 있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난 정부에서는 이것을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에는 없었고 그전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게 2018년도에 고용산업 위기지역이라 그래서 군산, 거제, 영암, 한 5개 시군을……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안부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이미 수많은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새로 정권이 바뀌면서 지역경제가 워낙 어려우니 그것의 일정한 것을 우리 중앙에서 좀 부담해 주겠다라는 차원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습니다. 할인율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이미 저희 의성 같은 경우에도 10% 할인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방이 계속 부담했던 것을 이번에는 국가 차원에서 행안부가 좀 지원을 해 주겠다고 봐도 무방한 사업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큰 틀에서는 가되 차관님, 국외업무 여비도 있네요. 지금 해외출장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64페이지 그 돈은 예산……

○임미애 위원 91페이지.

○조정훈 위원 아니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증액에 큰 돈은 아니지만 해외여행 경비도 넣어 두시고, 정책 연구한다고 5000만 원 해 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지금 빚 내서 하는 추경인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1차 추경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해외 사례도 연구를 하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그래서 들어간 거고요. 이 부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들 의견 따르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이런 것 하지 마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 1회 추경 때 저희보고 지시가 됐던 겁니다.

○조정훈 위원 누가 지시했어요, 1차 추경 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심의 과정에서 외국의 이런 유사 사례도 찾아서 계속 연구를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지금 추경인데 정책 연구한다고 5000만 원 연구용역하고, 작은 돈인 건 아는데 이렇게 썩썩 넣지 마세요.

저는 이걸 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게 1차 추경 때 들어 있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1차 추경입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2차 추경안 여기 산출내역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잘못……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번에는 반영 안 돼 있는데요, 위원님? 그게 다 1차 추경 때 들어간 겁니다. 2차 추경은 순수하게……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했을 수 있으니까 자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2차 추경은 전체가 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연구나 해외여행 이런 것 없는 걸로?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한병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92페이지 행안부 마지막 감액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을 수행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집행률 저조, 시기상 부적절 및 건설경기 부양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52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만 좀 말씀드리면 매년 집행률은 100%고 지방에서 집행되는 실집행률도 90% 이상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은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준공할 수 있는 사업이 8개 또 사업 기간을 조기에 확 당길 수 있는 사업들이 나머지가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전액 집행 가능한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차관님, 이게 지금 집행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2024년 실집행률이 91.3%, 행안부의 올해 실질적인 집행은 5월 말 기준 49%.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장마 시절이잖아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도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49%밖에 안 됩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오랫동안 매년 연차적으로 이삼 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또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최소한 3년 정도는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5월 달까지 한 50% 됐고 연말까지는 실집행이 90% 이상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추경을 해 드리더라도 장마가 이미 시작됐고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에 지금 돈을 더 주면 공기를 좀 단축해서 올해 준공을 빨리, 내년도에 될 것을 올해 할 수 있는 것들 또 공기를 충분히 단축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건설경기 부양효과 그건 건설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역의 건설경기 부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건설경기 부양 SOC성 이거를 급히 편성한, 너무 속전속결로 되지 않았느냐. 지난번에 이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냥 갖다가 었은 것 아닙니까, 이것?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 사업은 건설경기를 부양한다 이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재난본부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수많은 재난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빨리 준공하는 것이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추경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하는 것까지 이자 부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푼이라도, 이것 마른 수건 짜서 국가 경영을 한다는 각오로 오히려 국가 부채가 증가하니까 이거를 좀 보류해 놔다가 본예산 때 집행하는 것 어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해 예방 사업은 1원을 투자하면 4원의 효과가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할수록 B/C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김대식 위원** 그거는 공감하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49%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이거는 집행률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 이것도 주시면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위원님 하고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이소영 위원** 일단 집행률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엄청 높은 편인 것 같기는 하고요. 재해 예방 예산은 삭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공감하는데 상반기에 집행이 지금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서 재해 예방을 했어야지 왜 지금 추경에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소영 위원** 건설기본법이 변경돼 가지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랑 등등 이런 사정 때문에 공기 단축이 지금 현장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김대식 위원** 중대재해처벌법 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속전속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사람들 다 알지.

○**이소영 위원** 위원님,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는데요. 무리하게 공기 단축하는 거는 막아야지요. 그것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상관없고……

○**김대식 위원**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소영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건설 현장에서의 공사 지침이나 법규가 바뀌어 가지고요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시킬 수 없어서 아마 그랬을 것 같고,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를 못 했을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집행률도 굉장히 양호하고 올해 안에 집행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삭감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한병도** 차관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거와 관련돼서 사업하는 지구가 420개인데 이거를 잔잔하게 늘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까지 일일이 확인해서 이 중에 연말까지 추가 집행이 가능한 것 그거를 발굴한 게 33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100% 집행이 가능하고요.

현장의 안전수칙 관련해서는 열흘 전에 제가 광주에 있는 모개미천에 다녀왔어요. 거기 가 봤더니 안전수칙 지키면서도 비 내리는 중간중간에 다 검사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재해와 관련된 것 해 줘시다. 그게 지방 입장에서……

○**소위원장 한병도** 지금 흔들리고 계셔. 반영해 줄까요?

○**김대식 위원**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니까요. 찬성하는데 그게 꼭 지금 현재 가만히 있다가……

내가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국회 들어와서도 계속 협치하고 통합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가요. 가는데 예산을 일방적으로 다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갔더라면 이게 추경에 안 들어가도 될 건데 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지향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넣어라. 민주당이 그러면 정권을 안 잡을 거냐, 정권 잡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갑자기 지금에 와서 부랴부랴 이거를 넣느냐 이거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겠습니다.

이것도 근본 취지는 공감하나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안전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 오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2건,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먼저 1번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정부 재원을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펀드 투자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고 금번 증액분은 추경의 시급성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60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42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두 번째 칸, 또 다른 내역사업인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본 사업과 동일한 이유로 25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가 결성이 되면 통상 4년에 걸쳐서 투자가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검토의견 나왔던 중에서 말하자면 잔여 투자 여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사례를 보면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만들어진 부분들이 26.3%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 만든 지 2년 차가 된 것은 81%, 3년 차가 된 22년도 펀드는 89%, 그다음에 4년 차는 121%, 그러니까 말하자면 투자 금액을 회수해서 재투자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펀드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형태로 4년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에 만들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 대부분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4년간의 투자 호흡 기간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영화 제작 편수가 1년에 48편 정도 제작되던 것이 현재 16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말하자면 67%, 3분의 2가 줄어든 것인데 최근에 ‘오징어게임’ 같은 드라마가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러한 여력이 앞으로 더 이상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영화라든가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문화산업과 한류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이 과연 연말 전에 집행이 가능하냐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3개월 정도면, 서두르면 펀드 결성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펀드에 관한 비용을 줄이게 되면 민간에 나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콘텐츠산업 분야에 대해서 민간 투자도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정부 자금이 들어가면 5 대 5에서 한 6 대 4 정도로 민간 자금이 추가가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두 차관님들.

저는 대한민국 K-콘텐츠의 투자 그리고 K-콘텐츠가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는 것, 자랑스럽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 동의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첫째로 일단 이게 추경의 대상이 맞는가? 민생경기 추경이 맞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펀드를 조성할 수 있고 투자는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그렇지만 만약 금년에 결성이 안 된다면 내년엔 펀드가 고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그야말로 경제의 싹틔줄까지 내려가는 시간은, 시점은 내년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삭감한다는 게 아니고 원래 예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경을 하는데 이게 더 출자할 필요가 있냐라는 질문이지,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었지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적은가 봤더니—이것은 어쩔 수 없이 기록에 남겨야 되겠는데—작년 2025년 본예산 처리하면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것 250억 원 삭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은, 허영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은 이 똑같은 사업에 1300억 원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 바뀌니까 바로 850억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일관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난번 본예산 삭감할 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삭감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보복성으로 삭감 못 하겠다, 받지 못하겠다는 아니지만 기록에는 남겨야 되겠고.

그리고 추경에 이 항목이 적합한가? 아까도 우리 논의했지만 국채를 더 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진 상태에서 집행도 안 되는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된다는 담론이 과연 옳은가. 저는 이걸 좀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문화사업 K-콘텐츠 사업에 저희가 동의한다면 내년 본예산 할 때 넉넉하게 펀드에 추가 출자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해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 차관님,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본예산에 대해서 감액 요구 그 상황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그 부분은 저희 부처 자체의 문제라든가 펀드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전체 예산 모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편입을 해야 될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비중 자체가 높았던 펀드 부분에서 일부 예산을

조금 삭감하셨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민간에 대해서는 되려 나쁜 시그널로 전달이 되어서 정부가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민간에서 하시면서 민간 투자가 위축될 수가 있는 나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을 때 금년에 투자가 되어야지만 이 부분이 이후에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어서 내년도에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실질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래서 이게 시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확고하게 시그널을 보내야 되잖아요. 정부가 출자를 하게 되면 대응해서 또 민간이 투자가 되고 투자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제작사가 붙게 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민간에서는 지금 펀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지금……

○**안도결 위원** 예를 들어 경쟁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펀드 있잖아요, 설립하는 데 민간 쪽에서 들어오겠다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민간 쪽에서는 지금 다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콘텐츠 제작 기업들은 지금 거의 부도 직전까지 몰려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펀드 투자만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수백 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도결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자펀드를 10개를 만들려고 했더니 15개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시장에서 그 수요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시장에서 VC들 간에는 지금 경합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도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 대 1 뭉그런다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안도결 위원** 그 정도로 수요가 많고 또 K-컬처 있잖아요, 지금 한류 바람이 불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활용을 잘해야 되지요. 때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 같고요.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의 여유는 투자하는 데 시차가 있고 또 가용재원의 범위도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약간의 조정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원의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그 부분은 또 기재부와 저희가 적절한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이어서 106페이지입니다. 2번,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공연예술 창·제작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 일정 지연과 집행 부진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이 없으므로 14억 7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환경 토양

문제가 미해결된 상태로 진행된 사업이므로 1억 8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먼저 두 번째 부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신 김재원 의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1억 8500 감액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앞부분의 공연예술 창·제작 공간 조성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지난해에 예산이 편성되던 당시에 약간 정치적인 공간으로 오해가 되고 있는 자유총연맹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혹시 대안이 있을지를 검토해 보라는 것이 부대조건으로 붙었기 때문에 그 대안을 검토하는 기간 때문에 사업이 일부 6개월 동안 진도를 못 나갔던 부분인 것이지 다른 이유로 진도가 지연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19개의 서울 시내 공간들을 조사를 해서 조사를 완료했고 그 조사 완료한 내용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차관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왜 그때…… 지금 국립극장 앞에 자유총연맹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김대식 위원 거기에 왜 지금, 이게 1차 추경에 14억 77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편성이 되던 당시에 그 자유총연맹 부지를 꼭 써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립극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안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저희가 그 부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19개의 대체부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 조사한 결과 현재 최선안이 그쪽 부지가 가장 낫겠다라는 의견이 정리가 되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더 이상 다른 이유로 지연될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번 신기술 융합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추경 편성의 요건이 시급성임에도 불구하고 연내 집행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3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지난 1차 추경 때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GPU 확보를 위한 예산이 2조 가까이 편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GPU라고 하는 부분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GPU만 만드는 것을 가지고는 AI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반쪽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콘텐츠를 확보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관련된 예산 245억이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반영됐고 그것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더니 71개 과제를 선정하는 데 752개의 업체가 제안서를 냈습니다. 무려 경쟁률이 11대 1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쪽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AI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AI라고 하는 부분이 저도 지금 유료 버전만 네 가지를 쓰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경쟁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퍼플렉시티나 클로드나 챗GPT의 경쟁력 자체가 한두 달 사이에 바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기술 격차가 서로 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정말 한 달, 두 달이 시급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 쪽에도 조금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서 저희 쪽의 잠재적으로 이쪽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관련 업체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반영을 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차관님,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민생회복 그리고 부채 추경인데,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인데 지금 여러 가지…… 첫 번째, 제가 추경 집행계획안을 보니 실집행은 올해가 아닌 내년 6월, 사업 기간 1년짜리더라고요.

사업 기간 1년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런데 내년 6월에 실집행이 아니고 실제 집행 자체는 저희가 2~3개월 안에 업체 선정해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집행을 완료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그것은 계약서를 쓰는 게 3~4개월 뒤인 거고 실질적으로 각 기업들 연구소에서 산출물을 만들고 이 사업이 끝나는 과정이 1년이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예산의 역사를 따져 보니 본예산에서 370억, 1차 추경에서 65억 늘어서 530억, 지금 300억 더 요청하셔서 836억이 되고 프로젝트 방향도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단가도 커지고 이제는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을 포함시키셨어요.

저는 대기업에 지금 돈이 부족해서 AI 콘텐츠 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국가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 돈이 남는 돈도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대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고 집행도 1년이나 걸리는데 이게 과연 가장 시급한 민생경기 회복 목적에 맞느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돈에 여유가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해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국채 발행하고

내년도 경제성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 값을 가능성도 지금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건 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차관님, 우리 국내 콘텐츠 기업의 AI 활용률이 몇 %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활용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10% 내외 정도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AI의 활용률이 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미국은 저희의 한 3배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굉장히 늦어진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그래서 저희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AI 관련된 라이선스를 확보하거나 특히 한국형 AI 개발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까지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욱 정부 쪽에서의 지원은……

○임미애 위원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처럼 이 관련된 기술개발에 대해서 콘텐츠 제작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들이 이러한 것들의 R&D를 할 만한 여력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중물 역할을 정부가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나은 여건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단순히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특정 대기업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파이프라인과 연계되어 있는 관련 기술 기업들, 콘텐츠 제작 기업들 그다음에 유통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그 연관 산업에 있는 기업들 수십 개가 결합이 되는 개념으로 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대기업에다가만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가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나중에 유통, 마케팅 그다음에 IP 활용까지 연계되는 프로젝트로 지원되기 때문에 조금 더 대규모로 이번에는 준비를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국내 콘텐츠 기업의 AI 활용률이 그 정도로 낮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대신 존경하는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추경의 민생회복과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민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도 저희가 실제로 시장에 우리 정부가 AI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이렇게 적극적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쪽 분야의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로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도걸 위원 조정훈 위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나라 살림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번 추경이 민생이다,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두가지지요. 첫 번째, 민간소비가 확 죽어 있으니깐 정부가 재정을 좀 늘려서 재정 소비로

내수를 올려 준다는 거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민간 투자를 유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경제가 살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자그마한 마중물 투자를 했는데 그에 연계해서 민간의 기업에서 투자가 확 일어난다라는 게 진정한 민생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AI 콘텐츠라든지 문화 콘텐츠 이 분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힘이 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약간의 마중물 투자에 보조를 해 주면 본인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하게 된다 지금 이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안도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전부 다 민간의 어떤 매칭투자가 전제가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안도걸 위원 그런 거고 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기업의 대응투자가 있을 거예요.

자부담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저희가 5 대 5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고……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요, 정부가 5를 넣으면 민간이 또 5를 넣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민간의 투자가 일어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수요가 많고 긴급하고 또 저희에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가가치,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콘텐츠가 나오고 또 젊은 층들을 지금 고용할 수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한 가지만 첨언드리자면 영화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AI가 활용되는 부분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잠재적인 기술 면에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투자를 들어가면 이쪽 산업에서 경쟁력 확보하는 데는 가장 적시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잘 알겠습니다.

신기술 융합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어서 122페이지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관련입니다.

1번과 2번 사업 간에 증·감액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문화중심 도시육성(지자체) 사업의 맨 위 칸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사업에서 건설비 2억 원을 감액해서, 2번입니다, 2번 글로벌 문화관광타운(지자체) 사업의 근대역사문화 등 권역별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및 관광 이미지를 형성하는 글로벌 문화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일반연구용역비 2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의견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2억, 의견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의견 없으니까 이것은 넘어갑시다.

○조정훈 위원 합의.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것은 증액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나중에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보류를 해야 되나?

○임미애 위원 나중에 보겠다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나중에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보류하시고요.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23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향유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 내역사업인 공연예술쿠폰 지원 사업과 그 아래 두 번째 칸 또 다른 내역사업인 미술관 전시관람료 사업에 대해 현행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할인권 발행은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어 증액이 불필요하므로 두 사업 모두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득공제하고의 중복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소득공제를 문화비로 받으려면 일단은 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만 되고 그다음에 1년에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사용해야지만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전시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5% 미만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공제라는 것을 통해서 개별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거나 관련 업계에서 이익을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 코로나 때 저희가 공연·전시를 포함한 7개 분야에서 쿠폰 발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공연시장 같은 경우는 30% 이상의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이미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플랫폼들과 이미 준비를 거의 끝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은 거의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별 국민들과 더불어서 또 가장 열악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공연·전시 분야의 예술 분야 쪽, 예술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이번 추경은 쿠폰이 많네요. 이것도 공연예술쿠폰, 미술관 전시관람료 할인권 이런 거지요. 그러면 공연예술쿠폰은 공연당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공연티켓의 평균 단가가 대략 4만 원으로 조사가 됐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공연티켓당 1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략 한 25% 정도가 할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쿠폰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0억이지요? 50억……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51억입니다.

○조정훈 위원 50억인데, 그러면 이게 공연의 숫자보다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선착순으로 갑니까, 어떡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저희가 플랫폼 다섯 군데 정도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조정훈 위원 티켓링크 이런 데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선착순 형태로 개인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개인별로의 상한은 통제가 됩니다.

○조정훈 위원 개인별로라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그러니까 각 플랫폼별로 회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인당 너무 많은 티켓을 갖다가 예매할 수는 없도록 그 부분……

○조정훈 위원 몇 장까지 예매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지금 2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정훈 위원 그러면 5개 플랫폼이니까 각 플랫폼에서 제가 2장까지는 이 1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1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조정훈 위원 그렇게 해서 50억이 될 때까지 계속할 거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미술관 전시관람료는 얼마씩 해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미술 같은 경우는 평균 티켓 단가가 2만 원 정도 되고 있고 현재 할인 단가가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3000원 할인이면 너무 적다라고 해서 할인금액을 5000원으로 올리는 증액안을 예결위 쪽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게 지금 증액 3000이고요.

저는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민생경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도 일견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 보면 안도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티켓 가격과 공연 가격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생깁니다. 무조건 생기지요. 1만 원 올라간다, 쿠폰 준다 그러면 공연료 50% 올립니다, 티켓 가격.

이런 식의 물가상승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지금 만약 이러한 쿠폰제도가 상설화된다면 말씀하신 우려가 현실화될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은 여러 가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쿠폰이라고 하는 걸 일시적으로 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서 갑작스럽게 공연티켓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이라고 하는 게 티켓을 보통 3, 4개월 전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티켓들이 아마도 하반기에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말씀하신 우려는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위원** 빛을 내서 영화 보는 것…… 아니, 공연 보는 것, 미술 관람하는 것을 깎아 드려야 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순환이 되어 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쿠폰 발행을 해서 매출 자체가 한 30% 증가된 효과도 있는데, 예술계의 평균소득이 연소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조정훈 위원** 차라리 그분들 소득 지원을 해 드리는 건 제가 백번 양보해서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공연을 보고 이 공연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많을까요, 아니면 중산층·고소득층이 많을까요, 현실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일반적으로는 고소득층이 많겠지만 금액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금전적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그러한 저소득층이 조금 더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정훈 위원** 3000원 깎아 준다고 저소득층이 안 보던 미술 관람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실제로 저소득층……

○**조정훈 위원** 어차피 볼 사람들 깎아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보던 것 보는 그 추가보다 어차피 볼 사람들 싸게 보게 만드는 효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 팔리겠지요, 이것.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넣을지 말지 한번 논의해 볼 거고요.

앞으로 문화예술을 도와드릴 때 이 효과, 이것은 보급을 하는 거지 어차피 볼 사람들 싸게 해 주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시잖아요. 차관님,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다시 한번 고민을 좀 깊게 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그런데 소비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 드리는 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앓으십시오.

○**임미애 위원** 차관님, 이것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할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할인돼서, 실제로 이 예산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저희가 보통 티켓을 예매하는 사이트가 한 5개 내외 정도가 있습니다, 예스24라든가 아니면 인터파크라든가. 저희가 그런 업체들과 이미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트에……

○**임미애 위원** 저희가 궁금한 건 이렇게 해서 집행되는 돈이 창작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물론입니다.

○**임미애 위원**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티켓 판매가 되는 부분들이 그대로 제작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돈이 참여하는 예술가들에게 당연히 배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수가 될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창작자한테 이 예산의 돈이 거의 다 돌아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거 예산의 일부라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효과를 반드시 작성해서 연말에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평균 공연 관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티켓 매매 숫자,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는 이것 승수효과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안도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하십시오.

○안도걸 위원 한 가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하실 때 콘텐츠 있잖아요, 펀드에. 삭감이 됐고 그때 허영 의원님, 몇 분의 이름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 사실관계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소위원이었기 때문에 아는데 소위에서 그런 논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정훈 위원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안도걸 위원 서면질의로 하셨던 거예요?

○조정훈 위원 예.

○안도걸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상임위에서 합의를 해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다라는 것하고, 그런데 이걸 요구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조정훈 위원 서면질의로 요구하셨던 겁니다.

○안도걸 위원 서면질의로요.

그 말씀을 좀 해 보실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사실관계가 좀 헷갈리는데요.

○안도걸 위원 그 말씀을 좀 해 보실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콘텐츠라는 전체 금액이 삭감된 건 맞지만 영화계정은 늘었어요, 23년도에 늘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영화계정 부분이요, 영화계정만 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체 펀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증액이 온 거는 영화계정으로 증액이 온 거거든요.

○소위원장 한병도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보류하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입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이시원 기초실장 이시원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 자료 2권입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세입 감액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인데요. 2012년에 여수세계박람회를 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정부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금 일부를 상환하고 지금 남은 금액이 3658억 원인데 25년도에 상환하게 되어서 그 상환금 3658억 원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정 여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와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연도별 10년 분할상환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올해 예산에는 10%에 해당하는 365억 8000만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차액 3292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임미애 위원님은 5년 유예 후 10년 분할상환하도록 변경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3658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지금부터는 회의를요, 우리 수석님도 지금 잘해 주고 계신데 좀 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찬반 의견을 한 분씩만 최소한으로 듣고, 쟁점이 벌어져서 토론하면 어쩔 수 없는데요, 그 외에는 제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시고……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을 먼저 좀 들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사실 이 안건은 지난번 1차 추경 시에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재정 당국과 상환 기간·방법에 대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상환 방법이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루었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인 상환 기간, 금액 등은 아직도 협의 중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이게 지금 세입 회계지요. 그러니까 세입 회계를 감액하자는 게 세입을 줄이자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차액만큼은 국채로 감당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 세입 감액이 의결이 되면 대차가 안 맞으니까 그 차액은 뭘로 감당하는 거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다른 지출 구조조정 방법이 있으면 몰까, 아니면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된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 차액을, 세입을 줄이면 국채로 발행한다. 그러니까 3658억이나 3292억을 추가로 발행한다? 저는 이것은 아까 우리 식사 전에 한 얘기를 다 고려해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저는 세입 감액에 반대합니다.

○임미애 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실제로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자체 수익이 약 14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수 박람회장에 대해 투자했던 돈을 한꺼번에 다 갚으라고 얘기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부처에서도 이야기 중에 분할상환과 관련해서 논의 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은 제 의견인데요. 부처에서 분할상환에 대해서 지금 다시 논의 중이라고 하니 그 의견을 다시 검토해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문 닫으라는 소리하고도 똑 같아요. 이 돈은 문 닫아도 다 못 갚아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4페이지는 감액 의견 내신 위원님이 철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51페이지 해양수산부 감액 마지막 사업입니다.

가거도항 복구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연내 집행 및 공사기간 단축 불가 등을 고려할 때 추경 증액분 8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이것은 2026년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연말 완공 예정입니다.

○김대식 위원 연말이지요. 지금 추가 예산편성하면 공사 완료 시기가 앞당겨지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최소한 6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올 연말까지는 힘들지요? 26년도 말까지는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내년에 마무리 작업을 조금 해야 되지만 그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160억이 5월 말 기준 실 집행 96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잔여 사업 집행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님, 지금 6월 말까지는 84%인 135억을 이미 집행했고요. 8월까지의 올해 본예산은 다 집행할 수 있고 추경을 주시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공사기간의 단축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연내 집행 84%까지 끌어올리면 목표치는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아닙니다. 위원님, 8월까지는 본예산을 100% 집행할 수 있고요 남은 기간에 추경 추가 80억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좀 더 말씀 올리면, 지금 남아 있는 공사가 소파블록 제작은 이미 다 완료했고요 이동해서 현장 배치만 남아 있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으로는 지금 현재 120개를 제작해 왔고요. 본예산으로 한 50개를 이동할 거고 추경을 주시면 나머지 70개도 연내에 다 가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누구 한 분 말씀하시지요.

○**안도걸 위원** 이 사업은 재해 예방 사업이고 조기 완공되면 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정부안대로 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임미애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동의? 보류?

○**박형수 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재해 예방 사업 하면 그러면 다 그렇게 해야 되게?

○**소위원장 한병도** 알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보건복지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휴가철이나 연말에는 지원자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21억 6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번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메터 개발 및 실증(R&D)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부양 효과가 불명확하고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정책적 장기과제에 해당하므로 33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복지부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약 개발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개발 비용과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들도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를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체 바이오 제약시장에서 추격자에서 시장 선도자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이 항체 의약품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기술적 우위를 시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이 사업은 기초연구하고 제일……

R&D 사업이지요, 이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단기간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추경에서 이것을 좀 줄속으로 끼워넣는다는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절차적인 정당성이……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연구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겨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정부 측.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기획은……

○소위원장 한병도 짧게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기획은 일찍 돼서 올해 5월에 완료되었고 내년도 예산으로도 제출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술개발은 좀 시급히 진행돼서 기술 격차를 줄이고 이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것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60페이지 3번입니다. K-AI 신약 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R&D)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부양 효과가 불명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므로 21억 8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우리 부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후보물질 발굴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임상 단계, 임상 단계에서는 활용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다량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AI 기술 활용의 임상시험 관심도는 8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도 저희들은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추경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죄송한 말이지만 다 AI입니다. AI 모델을 활용한, K-AI, 바이오헬스도 AI 보건인력, AI 활용 신약 개발, AI 데이터 활용, 'AI'만 들어가면 다 예산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번 AI 신약 개발 임상 모델개발(R&D)는 저는 이거 빗내서……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입니다. 지금 신약

개발을 위한 R&D 예산을 빚내서 할 만큼 저희가 지금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은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총사업비 얼마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정으로 시작해서 2029년까지 진행한다는 설명만 나오고 도대체 얼마가 총 사업으로 들지 나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과연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 임상과 임상 모델개발에 이렇게 AI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지도 의문이고, 저는 이견 전액 삭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총 사업비에 대해서……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요.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거 사업 주체가 어딘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 어디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이것 R&D……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공모할 예정입니다.

○임미애 위원 공모 예정인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임미애 위원 제약회사 대상으로 공모인가요, 아니면 병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산학연 병원이 연합해서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임미애 위원 산학연 병원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정훈 위원 이미 제가 알기로 그거는 제약사, 대형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소위원장 한병도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필요성이 인정돼요. AI로 임상시험을 하면 획기적으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도 그렇고 앞 사업도 그렇고 R&D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R&D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이런 거는 지금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사업 기획은 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하고 지금 예산편성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절차가 있잖아요. 혁신본부에서 검토도 하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하는 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 생각 들거든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래서 그런 타당성검토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건 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관련된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4번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의료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 사업에 대해 실질적 교육 효과가 불명확하

고 일회성 시범교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27억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우리 부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실수요를 반영해서 의료AI 기술 활용을 하여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또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AI 기술 수준의 편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하여튼 조정훈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AI를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줄속 추경이 편성됐다는 것이 나오고 사업의 구체성이 저조합니다. 지속가능한 인력 양성체계, 인증제도 이런 구조적인 것도 아니고 일회성 시범교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물론 앞으로 AI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의료기관의 AI 활용 역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저는 조금 희박하다고 봅니다. 임상실험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그랬지만 모델로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필요성은 인정이 돼요. 지금 AI가 의료 현장에 적용되려면 의료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의사분들이라든가 의료인력들이 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본예산이 6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27억 이렇게 반영돼 있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안도걸 위원 그 사업을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 그에 대한 자료,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근거. 좀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61페이지, 5번 제약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AI 활용 신약 개발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추경의 본질적인 긴급성과 시급성이 결여되어 33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복지부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개발에 AI를 활용하는 기술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례 없이 발전 중인데 국내에는 다학제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가 부족합니다. 고용부는 27년까지 1만 2800명 정도의 AI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서도 수행은 하고 있지만 실험 자율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실습교육도 필요한 실정에서 이 과제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또 AI입니다. 이 중에, 제약산업 육성·지원 중에 일부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내역사업이 AI 활용 신약 개발 교육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R&D 사업이 과연 민생경기 활성화 추경에 적합한 항목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게다가 빚을 내서 하는 추경에서 R&D를 한다라는 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내용도 이게 지금 신약 개발하는 회사에 AI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걸 교육시키고 홍보하겠다는 건데 이런 건 신약개발회사에서 하면 되는 거고 대학에서 하면 되는 거고 이런 큰 틀에서 민간이 하면 되는 거지 신약 개발 교육과 홍보까지 국가가 나서서 빚내서 추경 해서 이걸 한다? 저는 이것은 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AI가 바이오산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큰 틀에서 바이오산업은 민간이 투자하고 1상, 2상, 3상에서 민간이 열매를 따는 구조지 정부가 이것을 얼마나 육성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급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위험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 33억 원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이거 국내 대형기업들은 이미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하고 있지만 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되는 것은, 요청하고 있는 것은 중소 업체로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추가 요청 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첨단의료지원관 신꽃시계 첨단의료지원관 신꽃시계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새로운 방식이라서 어차피 AI를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 단축을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최첨단이라서 민간 쪽에서는 하고 있는 곳이 없고요. 우리나라에는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기간이라든가 비용을 단축하려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제약업체 자체가 글로벌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6번, 보건복지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의료데이터 거래에 대한 법제 및 윤리 문제가 논란이고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30억 3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복지부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의료데이터는 의료 AI 개발의 핵심 자원입니다. 하지만 의료 AI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의료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이런 의료 AI 발전의 골든타임을 맞추도록 정부의 마중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례가 창출되면 민간 차원의 데이터 활용도 활성화되고 또 데이터의 지속적인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이게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이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내 병원들 대부분 데이터 품질 표준화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고, 즉 쓸 만한 데이터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기업 입장에서 일회성 데이터 확보로는 개발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후에 데이터 비용이 또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 졸속 추경으로 추진하기보다 본예산으로 계획형으로 가는 게 더 안정적이다. 네 번째, 병원 데이터 공개에 여전히 소극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시 병원 협조가 관건이다.

이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추경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복지부 사업 5개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패키지입니다. AI 기반으로 신약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다시 한번 투자 우선순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R&D 같은 경우는 타당성조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등등을 살펴서 같이 일괄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한병도 이 사업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환경부차관 금한승입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손옥주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 오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01페이지, 환경부입니다.

1번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2차 추경 증액 요청분 15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질적 경기부양 효과가 낮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동 사업은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홍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 안전 확보에도 중요하고 또 이게 수계별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경기부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집행률 문제는 이 사업의 특성상 하반기 때 집행이 가속화되는 게 있어서 사실 작년·재작년도 다 90% 이상 실집행률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집행률은 문제가 없고, 특히 저희가 추경 사업에 반영한 50개소의 수위관측소는 이미 설치 위치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만 잘되면 저희가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지금 환경부 전체 사업을 보면 저는 이게 과연 추경에 적절한 사업인지 의문이 됩니다.

추경의 기준이라는 게 원래 단기에 집행할 수 있는 단기집행력과 소위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승수효과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감액을 심사하는 사업이 공통적으로 집행률이 6%, 20%,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수백억 씩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과연 타당한지라는 의문이 들고, 승수효과도 아시는 대로 환경부 인프라 사업이 KDI 연구에 의하면 가장 승수효과가 낮은 분야에 속합니다. 도로, 철도 또는 우리가 이따 논할 단기 직접 현금에 비해서는 한 2분의 1, 3분의 1밖에 승수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국채 발행의 부담을 지고 추경을 하는 상황에서 승수효과도 가장 낮고 또 단기집행력도 의문시되는 환경부 추경예산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은 감액을 요청합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이게 24년 예산하고 25년 예산을 보면요 애초에 25년 본예산에서 굉장히 적게 편성된 예산이에요. 실제로 연말에 결산을 했을 때 보면 집행률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50개소 연내 집행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 예산은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견해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2번 국가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매년 이월액이 상당하고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418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111억 원과 10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동 사업은 홍수 예방을 위해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저희가 올해 사업 중에 137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기 집행이 가능한, 충분히 추경을 쓸 수 있는 15개 현장만 간추려서 저희가 추경을 올렸고요.

이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대규모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토지보상비만 900억 원 이상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환경부의 국가하천정비, 이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환경부의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업이에요. 2024년 한 해에만 460억 이상의 이월액이 발생했고, 그러니까 돈 확보해 놓고 집행 안 하고 또…… 이번에 굳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겠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식 위원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지금 이게 전체 사업비가 커서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저희가 2022년 집행률도 93.6%고요 작년 사업만 해도 92.3%고, 이월 금액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월 금액이 줄어들 거라고 제가 예상하는 이유는 목감천 등 대규모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보상비만 해도 900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됩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월 금액도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하십시오.

○안도걸 위원 이 사업은 재해 예방을 위한 거지요. 그리고 공기를 앞당겨서 빨리 효과를 보겠다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부 원안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국가하천정비 사업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어서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업과 2번 사업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비점오염저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180억 12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역시 예산 현액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57억 8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2건 관련해 가지고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비점오염원저감 설치 사업도 실집행률이 아까 앞의 2건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러니까 12월에 가면 실집행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행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25년 비점오염저감 사업도 추경 사업은 토지 매입이나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 위주로 저희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지금 두 가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음성 대풍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을 추경으로 저희가 올렸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은 이미 실집행률이 50%가 넘고 특히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건 국가기간산업으로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기간 단축이 필요하고 음성 대풍산단의 경우에는 현재 기존 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서 이미 입주한 기업이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추경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이 2개 사업이 아까 사업과 같이 재난관리는 아닌 거지요? 산업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토목건설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부양에 분명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DI에 의하면 승수효과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가장 낮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추경이 이번에 일어나지 않았어도 기존의 본예산에서 된 사업들을 충실히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비점오염저감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그냥 올 초에 예상했던 스케줄대로 가는 거지요? 사업을 중단하거나 추경을 안 한다고……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러니까 이걸 좀 앞당기고 조기 완공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조정훈 위원 앞당길 뿐이지, 그러니까 추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이 멈추는 건 아니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사업이 멈추는 건 아닌데요……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차관 금한승 이런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늦어지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자체가……

○조정훈 위원 아니, 추경을 하니까 그 요청을 하신 거지. 그러니까 중단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중단되는 사업은 아닌데……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겠다는 말씀이신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원의 여유가 있을 때는 넉넉히 하고 말씀하신 것,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사업은 속도를 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원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국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자, 이것 하나만 여쭙볼게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인데, 지금 27년 준공인데 이것 드리면 언제 준공합니까, 이 추경을 드리면?

○환경부차관 금한승 추경이 반영되면 6개월 단축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26년 준공이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원래 전체는 2027년 12월인데 저희가 추경을 들여 가지고 공기를 단축하면 27년 6월에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6개월 단축하는 비용이 지금 5000억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4900억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올린 건 57억 8500만 원입니다.

○조정훈 위원 추경 증액안이 지금 저는 4927인데…… 잠시만요.

그렇군요. 이 금액으로 당길 수 있는 시간이 6개월이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6개월 당기기 위해서 또 이만큼의 빚을 낸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집행률 26%, 30%를 감안했을 때 여기다가 추경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액을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을 지금 저기한 거라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SOC 사업이잖아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재정승수가 제일 높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건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원안 유지 원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환경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입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기획조정실장 문성요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21페이지, 국토교통부입니다.

먼저 1번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브릿지론은 은행권이 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하는 구조인데 정부가 이를 대신 떠안는 것은 무리한 시장 개입으로 보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대형 건설사일 가능성이 높아 특혜 우려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저희는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감액에 대해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은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원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마중물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우수 사업장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민간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국가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나요? 결국 리스크가 있는 사업에 국고가 선제적으로 개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좀 모순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사실상 전액 국고 부담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 사업 구조의 현실성이 좀 결여되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특혜로 변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은 마중물 우수 사업장에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우수 사업장에 하는 것은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굳이 추경에서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지, 시간을 더 갖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저희 응답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안도걸 위원 여쭙볼게요.

이번에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되는 거지요? 저는 굉장히 교육지책이라고 보거든요. 브릿지론 자체가 아직 신용경색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PF들이 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한 거지요?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예.

○안도걸 위원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 정부가 이것 100% 다 하는 겁니까? 정부가 한 30% 할 거예요, 리츠에다가, 그렇지요?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예.

○안도걸 위원 70%는 사업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브릿지론 단계는 누가 수혜를 보니까?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통상 브릿지 단계에서는 대기업 건설사가 아니라 중소 시행 디벨로퍼들이 사업 주체입니다.

○안도걸 위원 시행사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예.

○안도걸 위원 이게 본 사업으로 들어가야만이 시공사가 정해지면서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사업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들이 지금 신용경색으로 인해서 그리고 주택경기 둔화로 인해 가지고 정체되는 것을 좀 뚫어 주자라는 최소한의 지원이다. 그것도 기업이 주로 하고 정부는 마중물 투자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취지를 생각하면 저는 여기는 정부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상 전액 국고 부담 아닙니까?

○안도걸 위원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정부 출자가 3000억 그다음에 회사채 발행 6000억도 보증이잖아요, 정부 보증이고. 민간 참여 마중물이 실제로 이게 100%의 재정 사업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몰라서……

○안도걸 위원 리츠 구조를 한번 말씀하세요. 저는 3 대 7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예,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와 김승범 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 예산 3000억을 이제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김대식 위원** 국비로?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예, 국비 출자하고 3000억을 3개로 쪼개서 AMC 세 군대를 만들 건데 AMC들이 각각 지원받는 예산에 매칭해서 민간자본을 끌고 오면 그 자본과 국가자본을 합쳐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채권 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1조 중에서 들어가는 3000억이 국비고 나머지 7000억 플러스알파는 민간자본과 민간자본이 들어온 에퀴티(equity)를 기반으로 한 채권 발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HUG가 보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예.

○**김대식 위원** 보증하니까 이건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지, 구조 자체가.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HUG는 민간사업에 대해서 보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도 HUG에서 그 사업 안정성을 보고 보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HUG가 보증해 주는 것을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 사업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22페이지 2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소득요건에만 해당하면 제한 없이 지원하는 사업 구조로 인한 수요 예측 실패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추정 증액분의 50%인 285억 8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저희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감액에 대해서도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2월까지 월세 지원을 신청한 저소득 청년 15만 7000명에게 계획대로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원안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혹시 위원님들 말씀하실……

○**조정훈 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7700억, 본예산은 다 소진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까지 60% 넘게 집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15.7만 명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연말에 777억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지금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572억이 있어야지 국비를 보완하고 지방비에서도 매칭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청년들이야 20만 원씩 월세 준다는데 누가 안 신청하겠어요, 정부에서 주는 공돈인데.

그런데 저는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청년의 기준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이라고 다 20만 원씩 월세 지원을 한다? 이건 저는 사회주의

연계라고 생각하는데 2023년 12월 이후로 그 기준이었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이 폐지된 것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정훈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그 기준, 결과적으로 보증금 20만 원을 갖고 얼마나 비싼 집에 사는지를 따집니까?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저희가 소득요건을 봅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조정훈 위원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어떤 주택에 사는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그 요건을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정훈 위원 왜 폐지했습니까?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지역별로 보증금도 다르고 월세도 다르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예, 죄송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 청년들이 20만 원을 받아서…… 저는 이것 주택 약자라는 의미에서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청년들의 숫자가 5만, 10만 이렇게 계속 늘어 나가면 ‘이제 월세도 국가에서 주는구나’라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구조를 다시 한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 준다고 과연 민생경제가 회복될 것이냐? 이것도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소비쿠폰의 지방세 보조를 해 주는 게 낫지 저는 이걸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게 돈은 이만큼 없는 상태에서 15만 7000명을 선정을 한 거예요, 대상자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경이 안 되면 연말까지 624억 원이 부족하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2차 한시사업으로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청을 받았고요. 그 인원들에 대해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검토해서 각 시군구별로 인원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말까지 신청을 받았을 때 작년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마지막 한 두 달 정도에 신청 인원들이 많이 폭증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재부랑 사전 협의를 하다가 추경이 논의가 될 수 있으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차질 없이 지원을 해 주자라는 취지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 돈이 없는데 신청량이 많아도 선정은 일부만, 돈 있는 만큼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만큼을 선정했다는 의미인가요?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저희가 19~34세까지 청년기본법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과 재산요건을 선정의 기준으로 두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에 그런 인구구조라든가 소득 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예측을 했던 부분이 있기

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게 부모들하고 따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같이 살다가 나오면서 지원 대상이 된 청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이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 알겠는데 이런 예산사업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저희가 처음부터……

○이소영 위원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냥 신청량이 많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미?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더 많이 신청했으면 저희는 추경을 더 해야 되고 추경을 안 하면 이분들은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고 주거를 잃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그러니까 저희가 예비비라든가 다른 사업에서 전용이라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소진 시까지라는 전제를 달아 놓으면 선착순으로 한다면가 추첨을 해서 인원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1차 사업에는 예상했던 거보다 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제한이 없이……

○소위원장 한병도 예, 안도걸 위원님 말씀 듣고서 정리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이소영 간사님 지적이 지금 맞아요.

그런데 2차 신청 언제 마감했지요?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올해 2월까지 마감했습니다. 1년간 받았습니다.

○안도걸 위원 2월이지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행정을 펼쳤나요?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작년 4월에 소득요건이라던가 이런 부분……

○안도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책임 여하를 떠나서 이미 선정을 했고 이 상태에서 형평의 문제가 있고 정부의 어떤 신뢰의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만약에 증액이 안 돼서 일부만 되고 나머지를 지급 못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15만 7000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좀 있고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에 이 대상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됐고요. 하여튼 이걸 국힘 위원님께서도 좀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오늘……

○조정훈 위원 아니, 국힘이건 민주당이건 이걸 책임을 져야지.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요 책임을 누가……

○조정훈 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정책설계와 사업설계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 확보된 거의 몇 배를 받아 놓고, 선정을 해 놓고 지금 못 주게 생겼으니 예비비 믿고 추경 믿고 하자? 아니, 국회를 뭘로 보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와 가지고 무슨 돈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권리금 달라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잘못한 거지요, 사업설계?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예, 수요를 잘못 예측한 거는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오늘 논의한 것까지 포함,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23페이지 3번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사업부터 125페이지 5번 일반철도 안전 및 시스템 개량 사업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3번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연례적으로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어 추경 증액분 중 200억 원만 반영하고 328억 13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4번 역시 매년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어 추경 증액분 3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5번 사업, 유사하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추경 증액분 6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연번 3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3년간 불용액은 없고 이월액은 4% 정도 발생을 합니다. 낙찰차액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이유에 이·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시설물이나 시설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진단하고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시급하게 지금 보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좀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연번 4번 되겠습니다.

이 또한 불용액은 없습니다. 불용액 없고 실집행률이 24년 같은 경우에는 98.7%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고속철도, 특히 호남고속선에 봉명터널과 계룡터널이 있습니다. 여기 궤도회로 부분에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데 왜 그런고 하면 터널에 습기가 많이 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궤도회로를 좀 잘게 쪼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27일간 1789대의 열차 운행 지연이 발생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시급하게 해서 안전한 철도 운행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연번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불용액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실집행률이 95.6%고요. 나머지 한 4%가 이월이 됐는데 그 부분도 지자체하고 협의 지연 등으로, 낙찰차액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금액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다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 또한 일반철도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작년에 철도노동자가 단전 구간 문제 때문에 구로역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고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보완을 통해서 사고를 막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그런 안전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고 이번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토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부처가 커서……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요. 정말로 돈 몇백 억을 몇천 원 이야기하듯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 규모가 커서 그렇게 하는데 지속적인 불용액이 발생을 합니다, 사업에. 그래서 추가 예산의 편성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2024년도에도 약 50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 최근 5년간 매년 불용액이, 이월이 반복된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본예산 대비 9.7%를 증가해서 528억을 편성했다 이것하고 기존 예산조차도 완전히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다, 2025년 본예산이 이미 5455억 원이 책정된 상황에서 추가로 500억 원을 더해도 전액 집행은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연말에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특성상 200억 원 정도만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보고요.

추경 편성 없이도 관리가 가능한 범위가 저는 200억 정도라고 보고, 또 뒷부분 고속철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투입 대비해서 단기 효과가 좀 부족하다, 열차제어시스템 궤도회로 습기 아까 말씀하셨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김대식 위원 습기 이런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연내 집행의 가능성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경으로 인해서 정말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인지, 저는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추경 편성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건설경기 활성화 관점에서도 집행이 더딘 개량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시중 자금 흐름에 기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낙찰차액 활용 없이 추경 편성하여 예산을 이월하거나 불용시킬 경우 불필요한 국채 발행만 늘어나 국가재정 부담만 가중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 보고 더 토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한병도 예,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 사업은요,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오히려 시민 안전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는 예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실제로 25년에는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비만 있으면 당장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사업에 대한 검토나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을 미뤄 두면서 안전에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부양 측면도 있지만 시민 안전의 측면에서 이 예산은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세 가지 사업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위원장님, 한 말씀……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이미 의견은 다 정리했으니까요. 반영해서 다 보류를 시켰으니까요.

○조정훈 위원 개별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개별적으로 나중에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어서 126페이지입니다. 6번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7년 준공 예정이므로 추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사업기간 단축이 어렵고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 구축 예산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추경 증액분 163억 2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는데요, 상임위 의결 내용대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철도관제센터에 필요한 게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을 지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될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 개발은 상당히…… 전국에 있는 철도운행시스템, 제어시스템과 같은 5종의 시스템들을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서로 연계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AI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시한이 27년까지는 완료가 돼서 28년에 운용이 되는 겁니다. 27년까지라고 하면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2년 반 남았는데, 시스템 개발하는 데 1년 걸리고 1년 반 동안은 충분한 검증 기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시스템들이 서로 연동이 돼야 되고 또 반복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1년 반의 검증 기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총사업비 협의 중이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 개발 비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협의가 지난 4월에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적정 소요 예산을 시급히 반영을 해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의 필요성은 동의하고요.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된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21년부터 27년까지 거의 6년에 걸친 사업이네요. 꾸준히 계속해 오고 계

신 거고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원래……

○조정훈 위원 추경이 없었으면 27년에 준공이 되고 관제센터 시스템 설치하고 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이 163억 증감 요청액이 도대체 시간을 얼마나 앞당깁니까,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개발이 6개월 정도 더 빨리 순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163억을 늘리면 6개월 빨리 된다 그렇게 결론 내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만약 이론적으로 추경 안 하더라도 내년에 본예산 태울 거고, 지금 6년 한 사업인데 이걸 중단하진 않을 거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요. 그렇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적기에 운용, 지금 이게 사업 기한이 27년이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 추경이 없었으면 원래…… 매년 추경하리라고 생각하고 사업 예산을 잡으시지는 않았을 거고 기회가 됐으니까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저희가 빚 내서 하는 추경이라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차관님.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민생경기 쿠폰도 나눠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지금 국채가 30조 해당되는 거라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좀 천천히 그냥 원래 스케줄대로, 저희가 원래 스케줄을 늦추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부 측?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이게 당초 계획이 27년까지 끝을 내야 될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년 시스템 개발하고 또 1년 반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을 해야 말씀하신 적기에 가동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29페이지입니다. 교특회계(도로계정)입니다.

1번 민자도로 건설지원 사업입니다.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토지보상 증액 편성에 대해 통상적인 보상 절차에 어긋나고 토지를 조기에 매입하는 것은 추경의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추경 증액분 12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동일 사안을 논의했었습니다. 정부안 유지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가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김대식 위원 참 이게 돈 좀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서 선지급도 좀 하고 이러면 좋은데 야당이 돼 놓으니까…… 계속 깎으니까 국토부한테 미움을 살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착공까지 지금 4년 이상 남은 장기사업이잖아요, 이 민자고속도로. 그런데 2029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조기에 하는 방안을 지금 민간 사업시행자하고 상의·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김대식 위원 원래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비가 착공 시점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그 즈음에 같이 이렇게 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미리서 수년 전부터 국가예산으로 미리 보상하는 것 좀 이례적 아닙니까, 4년 남았는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조금 빨리 시작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도 이것 인정하시네. 그래서 해당 토지가 또 국유지도 많고 실제 상승효과가, 지가 상승이 우려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이게 추경이잖아요. 추경이기 때문에 미리 589억 원을 토지보상비로 한다,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서? 그것도 4년이나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이것?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한병도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기에.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평택에서 부여까지는 작년 말에 개통이 됐고 지금 이 보상을 하려고 하는 사업은 2단계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여에서 익산으로 가는 건데 19년도에 도로구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개발 행위도 일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23년부터 이 사업 보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잡힌 예산으로는 95% 다 보상이 됩니다. 잔여 토지 5%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120억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8월에 수용재결이 납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나는 것을 감안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마무리 짓자 하는 차원입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만약 이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19년도에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벌써 난 상태이고 다른 지역은 다 보상이 들어가 있는데 2단계 구간의 경우에 일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사실 공항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이것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보상 관련해서는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임미애 위원 이게 하필 익산이어서……

○조정훈 위원 익산 지역 의원이 누구입니까, 지금?

○임미애 위원 이원택 의원님.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아니시고?

○임미애 위원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괜히……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아니면 삭감해 버립시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 사업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어서 137페이지입니다. 교특회계(철도계정)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광주-목포)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국고와 국가철도공단 5 대 5 매칭사업임에도 공단 부담 없이 국고만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추경 증액분인 10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로 의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지금 1000억 원을 추가로 요청하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한 것처럼 원래 고속철도 건설이 5 대 5인데 지금 국가철도공단 매칭을 확보하지 못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올해 분을 보면 올해 총 국비가 1386억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얼마 내기로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2673억입니다. 그래서 공단 5……

○조정훈 위원 이 1000억에 대한, 1000억을 원래 5 대 5로 매칭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런데요 금년에 기투입된 금액이 국비가 1386억이고요 공단 비용이 267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25년 기준으로는 공단이 조금 더 많은 포션을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이게 지금 2020년부터 27년까지 하는 거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총 사업비요?

○조정훈 위원 예.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전체 사업비는 3조 273억이 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3조 341억이라고 돼 있고요. 대충 맞고, 한 8년 가는 사업인데 단계적으로 무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1000억을 이렇게 확 밀어 넣으면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좀 빨리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몇 개월 당기는 겁니까, 1000억 더하면?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이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1386억인데요. 10월 되면 집행이, 다 소진이 됩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그래서 몇 개월 당기는 거냐고요. 그러면 3개월 당기는 겁니까, 내년 예산집행 시점까지? 10월이면 소진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10월이면 소진되니까……

○조정훈 위원 11월, 12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11월, 12월,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조정훈 위원 좀 석 달 기다리고 1000억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뭔지 알겠는데, 이게 그 지역의 중요한 숙원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저는 간사님들 상의하실 때 상징적인 금액 그래서 현수막 거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1000억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100억을 하든지 200억을 하든지 똑같은 현수막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감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안도걸 위원 그 현수막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1000억이 듭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기 있잖아요, 이 사업 당초 완공 연도가 언제였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27년 개통으로 돼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아니, 개통이고, 애초에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요. 지금 수년이 늦어졌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25년이라고……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25년인데 지금 빨라야 27년이에요. 그것을 지금 확실하게 지키했다라는 그런 국토부의 결심이 좀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 숙원을 넘어서 공기가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게 필요하고 당초 공기보다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사업이지요. 그래서 이걸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사업은 원안대로 하고 지금 이렇게 투입을 해도 27년에 완공이 될 수 있다라고 장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수정된 공기 27년 말은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교통회계(공항계정)입니다.

1번 제주공항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추경을 통한 조기 완공이 불가능하므로 추경 증액분인 21억 2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고 정부안 유지로 의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제주공항의 시설 개선, 필요가 있겠지요, 모든 공항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집행률이 특히 부진하네요, 자료에 의하면 2024년은 1.1%. 안 했다고 해야 되겠지요, 이 정도면. 이렇게 부진한데 어떻게 또 추경을 달라고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이걸 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제탑을 지금 다시 신축하는 건데요. 현재 제주 관제탑이 기둥으로 인해서 관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해했고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런데 그 특별한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업체가 중간에 파산이 되었습니다, 23년 9월에. 그래서 올해 연초에 사업 시공자가 다시 선정이 돼서 이제 정상 궤도에 지금 올라갔다는 말씀 드리고,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시공사 선정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과소하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 10월까지……

○소위원장 한병도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10월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될……

○소위원장 한병도 오케이.

○조정훈 위원 제가 볼 때는 23억 2100만 원 본예산에 반영된 것 올해 잘해서 집행을 30%, 1% 아니고 90% 이상 넘기면 내년에 예산 충분히 담아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안국제공항도 했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안 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아닙니다. 이것 하고 갈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른 위원님 말씀……

○임미애 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없습니까?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어서 2번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 준공 예정이므로 추경을 통하더라도 준공시기 단축이 어렵고, 조류 충돌 위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경 증액분 29억 3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정부안 위주로 의

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조정훈 위원 지금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본예산 집행률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은.....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현재 54%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당연히 필요하다고 참사에 의한 예방 차원에서 동의하는데, 과연 이 예
산을 우리가 다 쓸 수..... 이것 추경 해 드리면 100% 집행을 자신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설계가 이미 다 끝이 났고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옆의 구내도로하고 배수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도 적고 금액도 얼
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할 때 마무리짓고 연말에 다시 재개항하는데 다 세팅이 되고 나
서 재개항하려고 합니다.

○조정훈 위원 차관님께서 이것 확정, 100% 장담하시고 책임지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례
적으로 저는 이것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정부 원안대로요.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3번 드론 종합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
입니다.

내역사업인 드론 복합인프라 사업에 대해 2025년 본예산도 대부분 미집행 상태이고,
문화재 발굴 조사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이월이 예상되므로 추경 증액분 3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고 정부안대로 의결되거
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이게 2024년도에도 이월액이 과다하고 집행이 저조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업 대상지인 전북 고창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9개월 정도 늦어졌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 준공 목표 역시 사실상 지금 달성이 어려운 상황 아
닙니까?

그래서 집행 부진이 확인되고 또 건축·토목 공사비와 감리비, 정보화·기획 명목으로 30
억 추가를 요구했는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고 또 대규모 이월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꼭
이게 이번 추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추경 증액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문화재 발굴 조사는 끝났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금년 중에 착공이 가능한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25년도 예상 공정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공정률 30% 이상이 되고요. 이 돈을 추가로 하게 되면 45%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준공에 문제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준공이 내년인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미 사전에 치러야 할 모든 일들은 마무리가 됐고 결국 추가 예산이 편성되어야 내년 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이게 금년 예산편성할 때 작년에 문화재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과소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연초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 예산 반영을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임미애 위원 여기서 1개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것, 드론비행시험센터가 전국에 지금 몇 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전국에 11개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11개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11개 있는데 호남권은 지금 없어서 호남권에 설치하는 것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호남권이 여기가 유일한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어서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입니다.

미분양 안심환매(용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의 단기적 유동성 문제만 해결해 주는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추경 증액분 1000억 원 전액 감액 의견과 추경 증액분의 50%인 500억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미분양 환매(용자) 사업 감액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의결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사업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환매조건부로 주택 사업 준공

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방 건설경기를 감안할 때 본 사업의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이게 지금 지방에 가서 보면 참 아우성입니다. 지방의 건설업체들 다 자금 부도 나고 쓰러지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것을 도와주고 해 줘야 되는데, 건설사가 미분양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많이 한 것도 좀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김대식 위원 이런 시장 판단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딜레마예요, 사실은.

이것은 간사님들 두 분이서 좀 의논해 가지고……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시키라는 말씀인가요?

○김대식 위원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바로 보류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9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6분 회의중지)

(21시5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입니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김진명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 자료 3권의 7페이지 되겠습니다. 복권기금 지출입니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의정부와 창원에 신규 센터 2개소를 추가하려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성실하게 회생절차를 밟아 채무를 상환 중인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공정성 및 형평성 측면의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감액 의견을 하신 취지는 계속 연체를 하면서 파산 신청도 안 한 사람들이 이런 혜택까지 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계속 연체를 하면서 파산도 안 하신 분들이 대상이 아니고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해당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개인파산은 도저히 빚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상담하고 구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어제 제가 차관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어제 그걸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회생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 원안 유지?

○김대식 위원 보류로.

○소위원장 한병도 원안 유지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김대식 위원 간사님들끼리 결정하십시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알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2개 사업이 있는데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사업입니다. 국공채 발행수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악화 우려가 제기되므로 국가채무 증가 억제 취지에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아래 사업입니다. 위의 사업에 따라서 국채 발행이 줄어들게 되면 국고채 이자상환 금액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것은 지금 소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대로 증액 사업 규모와 감액 사업 규모가 결정이 돼야 국채 발행 규모하고 이자가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보류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9페이지 대외경제협력기금입니다.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융자)(ODA)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민간협력 전대차관 사업에 대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도 수원국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로 무분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캄보디아 -648억 5000만 원 등 총 1547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잔액 규모가 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 남아 있는 금액은 6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200억 원을 기

감액해 왔고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400억 원인데 400억 원도 마저 감액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한병도 400억 감액하는 걸로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한병도 그럼 400억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사실상 전액 감액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전액 감액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기획재정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감액을 마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기재부, 김승원 위원 감액 요청이 1500억인데 지금 잔액이 600억밖에 없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액을 그냥 없애겠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600억 있었는데 저희가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200억 감하는 걸로 제출했고요. 400억 남았는데 그것도 감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재정 공간을 만들어 내는 그 계산에서 얼마를 넣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를 감액……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400억을 넣는 거지요.

○박형수 위원 원래 1500억 감액 의견에서 400억 감액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1500억 감액 의견이 잘못된 숫자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정리됐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320억 원인데 감액을 400억을 한다고? 증감액은 320억인데?

○안도걸 위원 아니, 요구가 그랬는데요 400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소영 위원 기재부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안에 320억 감액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400억을 더 감액해서 720억 원을 감액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정부안에는 민간 전대차관이 200억 감액돼 있을 텐데요.

○안도걸 위원 200억인데 400억을 더 추가해서 600억을 한다 이거지요.

○이소영 위원 그러면 원래 200억 감액을 하겠다고 정부안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머지 잔액 400억까지 다 털겠다, 그러면 총 600억이 줄어드는 거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국회 심사 과정에는 400억이고요.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고 국회 심사 과정은 600억이 아니고 400억.

○소위원장 한병도 국가보훈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입니다.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김주용 기획조정실장 김주용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 오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 자료 15페이지 국가보훈부입니다.

1번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내역사업 간의 증·감액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인 보훈단체 운영 사업이 있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사업이 있습니다. 광복회 학술원 상근근로자 인건비 반영을 위해 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내역사업에서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보훈단체 운영 내역사업에서 광복회 학술원 상근근로자 인건비를 그만큼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와 김남근 위원님이 3800만 원 증액 의견이시고 김용만 위원님이 3500만 원 증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국가보훈부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인건비인 점을 감안할 때 학술연구사업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 사업은 증·감액 연계라 증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야 되겠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증액하고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참고로 3500만 원이고, 광복회도 해 주고 보훈단체도 빠지 말고 그러지요. 금액이 지금 3500만 원인데 상징적으로……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했으니까 포함 논의하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보훈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권대영입니다.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기한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김기한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 오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21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입니다.

1번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원금 감면 폭이 크고 대상자 범위가 넓으며 정책 신호 자체가 왜곡될 수 있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조금 전 오후에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감액 없이 정부 원안이 통과되었고 제가 철회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 조정훈 위원 유명하 위원이 철회했다고요?
-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이것 원안 의결……
-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원안 의결 희망합니다.
- 소위원장 한병도 이상 없습니다.
- 그러면 이것은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번입니다.
- 둘 다 철회입니까?
-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둘 다 철회했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2번 사업도 유명하 위원님이 철회의견서를 접수하셨다고 합니다.
- 소위원장 한병도 확인해 보세요.
-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지금 확인했습니다.
- 소위원장 한병도 맞아요?
-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없으시지요?
-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감사합니다.
- 소위원장 한병도 끝났나요?
-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금융위 끝났습니다.
- 소위원장 한병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미리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남았는데 여기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못 했기 때문에 회의 초반에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서면질의와 구두질의 내용을 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한병도 상임위에서 안 됐기 때문이에요?
-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산업위가 의결을 못 해 왔습니다.
- 조정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면 산업위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걸로 끝입니까?
-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안 왔으면 저희가 심사할 필요 없습니다.
- 소위원장 한병도 산업통상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안녕하십니까? 산업부1차관 문신학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산업부2차관 이호현입니다.
-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입니다.

1번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추경에 편성되더라도 본격적 예산집행은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고 신규사업 특성상 지연이 예상되므로 128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사업 공고, 접수, 심사, 협약 체결, 일련의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기는 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의 특성상 사전 행정절차의 지연이 예상되니까 금번 추경에는 사전절차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만 반영하시지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1차관입니다.

말씀처럼 그 절차를 다 거치기는 해야 되지만 그것까지를 감안했을 때 이미 저희들이 6월에 수요조사 14개 업종을 해 놓은 게 있어서 그 선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중소기업들이 업종별, 14개 업종에서 희망하는 부분들이 AI 활용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연내에 확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신규 AI 모델 개발하는 게 아니라 AI 공급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을 그냥 수요 기업에……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맞춤형으로……

○임미애 위원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인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안만 통과되면 공고, 선정해서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사업이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런 의미로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원안 처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이 사업 이번에 새로 기획하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주관은 중견기업이 하고 그 컨소시엄에 관련된 중소기업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지금 14개인데 꼭지당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되고 거기에 국고하고 기업들 부담은 어떻게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6개 업종별 컨소시엄으로 해서 솔루션 도입에 한 42억 원 정도가 되고 기업자 부담은 50%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5 대 5로.

지금 주로 중소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기부가 할 거냐 산업부가 할 거냐 이 문제도 고민이 됐을 텐데 협의가 됐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중기부 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들을 업종과 관계없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산업정책적 판단하에서 14개 주요 업종 중에서 우선 필요한 6개 업종을 이번에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부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솔루션을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게는 하지만 업종 어프로치는 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AI 솔루션 활용 사업은 있기는 합니다.

○안도걸 위원 약간 중복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번 그 사업하고의 차별성 그리고 부처 간에 엄격한 역할 분담이 돼 있는지 그걸 조금 확인을 할 테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어서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사업입니다.

1번 전력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대해 전력저감 및 소비 진작 차원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 우려되므로 3261억 3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과거 두 차례 편성되었던 소비 진작성 사업이나 실효성이 부족했고 전력효율 향상이 아닌 단순 소비 보조금에 불과하므로 역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아마 오늘 하면서 존경하는 박형수 간사님과 존경하는 이소영 간사님이 처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삭감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 동의합니다.

○임미애 위원 동의합니다.

○조정훈 위원 이 얘기 저도 산자위 있을 때 들었고 말씀하신 수정 이유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전액 삭감에 동의합니다.

○박형수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안도걸 위원 이 사업은 과거에도 좀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16년 그리고 20년에 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굉장히 경기가 어려울 때 또 에너지효율 확보 차원에서도 좀 효

과가 검증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소한 가전 관련된 중소기업체들에 도움도 좀 많이 되고 해서 추경 때마다 대표적인 아이টে็ม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는 여기에 한 32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한 10배 정도, 3조 원 정도 매출의 경기진작 효과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전력효율 향상이 있을 거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한 122GWh, 이것은 한 3만 2500 가구가 1년 소비할 수 있는 전력 절감량이거든요. 그리고 탄소 감축량이 5만 5400t 정도 되기 때문에 탄소 감축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물론 저희가 2020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구제품을 교체하는 비율이 56% 정도 나오고요. 구제품을 교체할 경우는 확실히 효율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 주기가 한 4년에서 7년 정도이기 때문에 4년 전, 7년 전 구매했던 제품보다 효율이 확실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56.3%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규 구매 같은 경우는 이사, 결혼, 독립 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 구매는 저희가 계속……

○안도걸 위원 그러면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대기업이 좀 혜택을 많이 볼 거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지요, 산업 생태계상으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전체 3조 매출 중에 중소기업들한테는 한 5000억 정도 매출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요. 대기업들한테 납품하는 중소기업들까지 합치면 1.9조, 한 2조 가까이의 중소기업 매출 효과가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좀……

차관님, 제가 간사고 해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결혼할 때 당연히, 이것 신혼부부 지원사업 아니지요? 결혼할 때는 이런 환급사업 없어도 당연히 사는 거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가전제품 대부분이 1등급입니다. 그렇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두 번째, 차관님 지난번에 정책질의할 때부터 자꾸 122GWh 말씀하시는데 그것 과장된 숫자인 것 아니잖아요. 제가 산업부가 무슨 근거로 숫자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2020년 사업에 대한 에너지공단 용역보고서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 다 봤는데, 기존의 저효율 가전제품을 쓰던 사람이 1등급으로 바꿨다는 전제로 그 가전제품의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5등급을 쓰던 사람이 1등급으로 교체한 건지 1등급을 쓰던 사람이 1등급으로 교체한 건지 그것을 산업부가 걸러 낼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을 여기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아무나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대부분이 1등급 제품인데. 가전제품 사면 그냥 다 주는 겁니다, 거의.

그리고 차관님, 지금 소비 대상 가전제품 품목 자체가,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 안 드리고 싶은데 지금 122GWh 말씀하셔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필수 가전들이 아니에요.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저소득층 서민들은 잘 안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몇백만 원짜리 식기세척기랑 의류건조기 사게끔 권장하면서 이게 전력소비를 줄인다고요?

저는 집에 전자제품이 이렇게 늘어나면 김치냉장고,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없었던 사람들이 다 사게 되면 엄청나게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122GWh라는 엄청난 양이 절감된다는 얘기를 지금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 정도 등급, 한 3등급 정도를 산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중간등급 정도 해서 1등급으로, 기존에 있던 제품들이 3등급이었을 때 그것을 1등급으로 했을 때 그런 전력 사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주장과 의견 충분히 감안해서 한 번만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왜 아무 이유 없이 보류예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데 삭감을 해야지 위원장님 마음대로 보류하면 됩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정부 측 의견도 있고 하니까요. 그전에도 여러 의견이 있으면 보류했습니다. 나중에 두 분이 논의하세요.

○**박형수 위원** 이것 정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정부 의견 들어가지고 정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여기서 의결 안 할 거면 회의를 왜 합니까? 그것은……

○**소위원장 한병도**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소영 위원님과 박형수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에 논의를 하겠다는 거지 의견 반영해서 결정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박형수 위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일단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없고 삭감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정부 의견이……

○**안도걸 위원** 저는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임미애 위원**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박형수 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박형수 위원** 그래야지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보류를 하든지 하지 삭감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 의견 들어 가지고 보류하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아까 안도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이것 충분히 반영해서 두 분이 소위 하면서 결정하십시오.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면서……

○**박형수 위원**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야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안도걸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견을. 아까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박형수 위원** 질문하면서 이게 삭감이나 아니냐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소위원장 한병도** 생각이 다른 걸 묻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다른 의견을.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었더라도.

○**박형수 위원** 물어만 봤지 그게 삭감 의견을 낸 게 아니잖아요.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전력 해외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전력기자재 금융 지원 사업에 대해 신보 및 기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므로 150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차관님, 이것 기존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보증에서의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지금 전력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보나 신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서라도 기존에 충분히 금융기관 추천을 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중소·중견 기업 위기에서 저금리 금융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시다마는 신보·기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은 담보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기업들인데 최근에 저희가 전력기자재 기업들이 수출이 엄청나게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노를 한번 저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기업들,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이런 취지에서 발굴한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 차관님, 이 사업이 타기팅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해외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설비나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설비나 장비를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요 자금들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안도걸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상당히 중견기업이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요즘 잘 나가는 게 ESS, 케이블……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기술력을 동반한 중견기업 정도를 대한다고 생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다면 이 기업들은 신·기보 프로그램의 보증 대상이 됩니까, 중소기업이 아닌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일부 기업들은 담보 능력이 없으면 신보·기보가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그 정도로 담보가 필요한 기업들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신·기보 보증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좀 한정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주로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신·기보 보증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전력기반기금에서 직접 용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중견기업들이 많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 이야기 분명히 하시라고요.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용자)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손익분기점 도달까지 약 20년가량이 소요되는 저수익 사업이며 과거 각종 부정 사례가 있었으므로 2차 추경 증액분 10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그 아래에 2327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이게 소위 태양광 산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3263억이 본예산인데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실집행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2022년 90%였습니다만 2023년·24년에는 98% 정도 집행률……

○**조정훈 위원** 지금요, 지금 25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25년 기준으로는 실집행률은 14.5%입니다만 집행이……

○**조정훈 위원** 18.5%인데 일단 또 1000억을 더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더 추가로 해 가지고 2000억을 더 증액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시기는 한데 일단 태양광 산업,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민생 추경 그리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낙수효과 또는 승수효과가 있느냐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용자)에 1000억 원을 더 증액하는 것이 민생 경기에 도움이 되는지, 그러면 태양광 설치를 지금 계속 더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승수효과가 과연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장비 면에서 이미 대부분 태양광 시설, 패널 등은 수입품이라는 시중에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수입품 사는 건데 우리가 추경 해서 해외, 외국 수입하는 데 돈 다 쓰는 것 아니냐, 물론 시설, 설비 설치 등은 우리 노동력이겠지만.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이십몇 조 추경 빚 내서, 국채 발행해서 추경 하는데 이렇게 1000억을 내면서까지 태양광 설비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지 저는 매우 의문이 되고요. 이것은 보류해서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세 가지 정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국내에 설치하고요. 이미 수요조사가 됐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수요조사가 주로, 예를 들면 농촌형 태양광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산단의 지붕이나 이런 데에 설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다 해당이 됩니다.

○임미애 위원 모든 걸 다 통틀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금융 지원 사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수요조사 어떻게 하셨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수요조사는 작년에 저희가 태양광 설치를 위해 필요한 영농형 산단이나 지붕형 산단 태양광 이런 것들을 해서 업체별 수요조사를 다 받아 봤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된 것보다 추가적으로 1000억이 더 필요하다는 것들이 조사가 돼서 했고.

아까 실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실집행률은 원래 먼저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8월 달부터 바로 집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률은 하반기 때 집중이 되는 현상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미 발굴된 사업들은 선정만 되면 바로 하반기 때 집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융자금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차관님이 에너지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태양광이 한국 지형에 맞습니까? 태양이 지금 한 네 시간 바짝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맞지 않고, 지금 시골에 가 보면 진짜 태양광을 설치할 때 제대로 하면 좋은데 온 산을 다 헐어 가지고 산사태가 나면 이게 참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세요?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 한번 들어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으로 다 했고 그런 이야기가 다 나와요. 이게 지금 마피아라고 할 정도로 나오는데 이것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가 전달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님 말씀을 익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에너지는 믹스로 갖고 가서 대규모 전원들로 해서 송전망으로 공급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산전원 해서 지역에서 지산지소 형태로 태양광이나 풍력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홈그로운 에너지인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원안보 차원에서도 일정 정도의 태양광이나 풍력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사업이나 보급사업은 탄소인증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중국 제품은 사실상 들어올 수 없는 허들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차관님,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

양광의 효율성, 풍력의 효율성, 풍력 같은 경우에는 북해나 영국 같은 경우에 비해서 우리가 절반밖에 안 되고 태양광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텍사스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감안을 해서 에너지정책 운영을 해야 되고.

차관님 아까 잠깐 송전망 얘기를 하시던데 전력망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설비만 자꾸 늘어나 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 지금 태양광이 가동 중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융 지원을 자꾸 해 줘 가지고 설비만 자꾸 늘어나면 이 송전망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송전망이 언제까지 될 수 있으니까 발전 설비를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해야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에서,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에서 설비만 늘어나고 송전은 못 해 가지고 가동 중단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정책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본예산 때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 본예산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차관님, 이 사업이 물량 매입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큰 에너지믹스 정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 그리고 또 RE100 산단 이런 위에서 정부가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급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이만큼에서 이만큼 올리는데 그를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그것을 맞춰 가는 데 이게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또 말씀 맞잖아요, 박형수 간사님의 말씀이. 전력망이 지금 문제인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전력망은 전력망대로 또 투자를 확충해 가지고 병행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이게 통과가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일단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재생에너지……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할게요.

○이소영 위원 차관님 대신 제가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일단 재생에너지 예산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재생에너지가 이웃 나라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가 안 돼요. 한 자릿수인데, 일본은 벌써 20% 돌파를 했고요.

윤석열 정부가 세운 계획에 따르더라도 2030년까지 18.8%로 이것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짧은 기간 동안 10%나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추려면 이것보다 더 몇 프로를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의무인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수입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석탄, 석유, 원자력까지 원재료 다 수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그만큼 햇빛과 바람만으로, 우리나라 햇빛과 우리나라 바람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률이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전력 부문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고.

승수효과나 민생경제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분산형 에너지, 개인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누군가에게, 대기업에게 이익이 독점되는 구조가 아니라 개인들의 작은 사업들로 지역의 작은 건설사들도 이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밑에 기반공사까지 해서 6개월 내에 보통 설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으로 2억, 3억 투자해서 100kW 정도의 태양광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민생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 건설경기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국가 감축목표와 재생 에너지 목표를 맞추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

이 뒤에도 재생에너지 관련한 삭감 의견이 다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님, 산지에 태양광 설치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당시에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 경사도가 25도였습니다.

25도 경사도일 때 허가를 내준 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였고요. 이게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설치가 되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고 이 문제 때문에 이후에는 경사도 15도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는 실제로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허가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신규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산지에 태양광 패널 얹혀져 있는 게 많은 분들한테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한번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은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라 사실은 융자거든요. 그리고 농촌지역이든, 실제로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농촌지역인데요. 농촌지역에서 이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돈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를 받아서 농촌지역의 원하는 곳에 혹은 산단에, 이런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잠깐만요, 김대식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잘못하면 토론이 돼서, 이게 예산 심의에서 토론이 되었는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번 구조상 유럽과 우리나라 태양, 그러니까 햇빛이 쪼이는 그런 시간대 그리고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그것에 투자해 가지고 공급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투자할 때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이렇게 바람직한데 거기서 생산하는 에너지와 지금 우리 소요하는 이것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한국전력이 그 에너지를 조금 비싸게 사 와 가지고 싸게 파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적자폭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서, 차관님이 에너지 전문가시니까 전체적으로 먼 그걸 보고 이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돈을 지불하고 안 지불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고향 갈 때 시골에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완전 좋은 산천초목을 다 버려놨어, 그냥. 그것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지.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을 듣지 않아도 위원님들 심도 있는 토론에서 내용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번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주택지원 사업과 또 다른 내역사업인 건물지원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두 사업 모두 본예산이 집행 목표치에 미달한 상황이며 전기요금 수익을 노린 소득성 보조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118억 3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그 아래에 1650억 62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아까 것과도 연장된 선인데 아까 건 융자고 이것은 직접지원, 보조금 드리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보조입니다.

○조정훈 위원 예, 맞지요.

지금 현재 본예산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집행률은 9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수정이유를 보면 ‘주택지원 사업은 221억 중에 3억 원 해서 실행률이 1.6%다’, 맞나요? 건물지원은 전액 미집행이네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그것은 2025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사업자 선정 해서 본격적으로……

○조정훈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본 건 올해 본예산 1563억 7300만 원 중에 7월 2일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지금 현재 주택은 51%고요, 건물은 3%입니다만 지금 사업자 선정이 끝나서 바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7월부터는 집행률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연말에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과 앞에 있는 3번이 하나의 패키지인 것 같은데요, 같은 의견이고요. 앞엿것하고 이것은 좀 신중하게, 심사 보류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소영 위원 저는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1원도 감액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류를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어서 5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입니다. 긴급성을 요하는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국에너지공대는 당초 한전, 전라남도 및 나주시가 지원하기로 했으므로 1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그 아래에 200억과 10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참 말도 많고……

○소위원장 한병도 한 템포, 너무 급해.

부처 의견 듣고 위원님 말씀 제일 먼저 듣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부처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에너지공대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전남대나 목포대, 순천대, 호남에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 단과대학을 쥐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것을 산자부에서 이렇게 해서,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도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 원래 취지대로 한국전력하고 전남, 나주시가 부담을 좀 하라 하세요. 그래 놓고 다음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 놓고 계속해서, 지금 학생도 없고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국립대학 있잖아요, 전남대하고 목포대, 순천대, 전라북도예 전북대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에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원래의 재정 부담 계획대로 한전하고 전라남도, 나주시가 우선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남대나 조선대에 하면 되지 왜 별도의 대학을 두느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공대는 경북대에 하면 되는 거지 왜 별도의 포항공대를 뒀겠습니까?

○김대식 위원 아니, 포항공대는 사립이고……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면. 그것은 사립이 아니지요, 공기업에서 한 거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에너지공대는 어떤 지역에 특수한 대학을 두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가 됐고 이제 에너지가 모든 산업의 키를 쥐는 이러한 변화가 되니까 이런 쪽에 특화된 전문대학을 육성하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대에 선도국가 되는 고급 인재와 기술을 개발하자 그런 차원에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설립하고 운영 문제가 나왔을 때 정부가 확약한 게 있어요, 지방과 같이.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국가와 지방이 각

각 나눠서 하되 운영비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그동안 지자체·국가가 200억·200억 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왔어요. 지원해 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이것에 대한 게 흔들렸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그 기준으로 하던데요. 그래서 매년 200억씩,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반영을 안 했잖아요, 금년 예산에. 그래서 뒤늦게 100억이 지금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데 원래는 200억 수준이 서로 약정된 거기 때문에 200억은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주장이 되고 있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증액이 지금 필요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정훈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지역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발언, 말씀하신 것 저는 존중합니다만 백 번 양보해서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 전력과 인재 양성에 필요하다 해도 추경에 빚내서 특정 대학 운영비로 100억을 줄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빚내서 어떤 특정 한 대학에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줘서, 내용이 됩니까? 국내외 산업계와 교육·연구 교류를 촉진한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예산을 넣고 추경을 하자고 국회에 보내올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찢절매고 있고 다 다른 예산 짜내 가지고, 다른 부처에서 예산 짜내서 빚을 최소화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정 대학에 100억 원을 그냥 운영비로 주자고요? 그게 추경이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저는 이것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견이 있어서 이것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6번 산업통상자원부 마지막 감액 심사 사업입니다.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 R&D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로 경기부양이나 민생 지원이라는 추경의 편성 취지와는 무관하며 7월부터 편성되는 추경에 12개월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과도하기에 1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1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수 간사님.

○**박형수 위원** 경기부양이나 민생 지원이라는 기본적인 추경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태양광 셀이나 모듈이 중국산이고 또 중국에 비해서 기술이 오히려 뒤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추경으로 지금 급하게 넣어야 되는 부분인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보류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바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산업통산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마지막입니다. 기다리시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47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종전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단기적 예산 확대의 효과성이 낮으며 추경 시급성이 저조하므로 54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도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업 지원 사업은 최근에 신청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신청받아 보니까 한 2만 4000건 신청이 됐는데 현재 재원상으로는 한 2000개밖에 지원이 안 돼서 상당한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좀 반영시켜 주시면 아마 필요한 소요가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간단하게, 사업의 취지는 동의하고요. 또 딥테크라는 신산업이지요. 우리나라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 동의하는데요.

지금 추경 요구하시는 게 540억인데 회사들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원입니다.

○조정훈 위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가 지금 국채 발행해서 빚내서 하는 추경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지금 세금 내서 하는 건데 특정 기업에게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게 맞는지, 저는 본예산이면 충분히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추경은 성격상 이렇게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목적인 민생경기 활성화에 따라 나온 예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차관님,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계속사업입니다.

○안도걸 위원 계속사업이고, 그런데 AI에 특화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각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딥테크, 딥시크와 같은 우리도 그러한 아주 혁신적인 기업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그런 기업을 키울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추가하자 그런 내용인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시기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늦은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사실은 약간 후발주자적인 느낌은 있습니다만……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타이밍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원안 유지를 주장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견이 있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번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제조혁신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 상당 부분 다음 연도로 이월될 것으로 보이며 1차 추경 당시 예산을 이미 증액한 바 있으므로 동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24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ICT융합 스마트공장, 저도 지난 기 상임위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고요 지지하는 예산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 이것 또 한 가지는 해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2629억 본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지금 저희가 한 71% 집행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집행하실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되면 저희가 바로 사업공고를 내고 늦어도 10월까지의 지원 대상기업이 선정이 되고 11월 중에 사업비 지급이 가능하고 바로 추경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사업체들에게 나눠주는 건 10월부터 하지만 사업 완성은 언제 되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완성은 보통 저희가 1년 정도 걸리는데요 아마 내년도 상반기나……

○**조정훈 위원** 그러면 실물은 아까 말한 민생 소비쿠폰 등등처럼 직접적인 민생효과가 바로 있는 건 아니네요. 실질적으로는 빨라야 연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026년에 효과가 나는 거네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지만……

○**조정훈 위원** 돈은 기업에 쏘는 거는 계약금이야 쏘겠지만 사업 완료는 1년짜리 사업이라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실제 집행이 하반기로 미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포함을 하게 되면 한 9개월 정도 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추경에서 이런 기회에 이런 사업 좀 다시 시작해 보자라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우선 순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삭감을 제안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한병도** 예, 임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제조업의 스마트화 전환이라는 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여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편성됐을 때 한 9개월 정도가 공기가 단축될 수 있다면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빠르게 진행하면 할수록, 현장에서는 굉장히 요구가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종전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펀드사업은 민간자본 유치·펀드결성 협약 등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경기 대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되므로 4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이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시급성을 따졌을 때 지금 이 추경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AI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그런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이고 이것이 좀 늦어지게 되면, 투자 재원을 조기에 저희가 만들지 못하게 되면 내년·내후년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지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자본이 기업에 바로 투입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이것은 출자 공고가 나면 저희가 가을쯤에는 선정이 다 돼서 펀드가 연내에 다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이제 국채 발행을, 추가적인 발행을 통해서 마련을 해야 되잖아

요. 그래서 실질적인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경우에 국채 발행 이자만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거 비용만 편성하고, 최소한의 준비 비용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출자사업은 매년 하는 것이고 상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요. 이것은 출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공고를 해서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출자 공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펀드 조성까지는 대략 짧게 한 3개월, 길게는 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펀드가 다 만들어질 수 있고 바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김대식 위원 즉각적인 경기 대응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나타난다고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기업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건 아니지요, 차관님.

○김대식 위원 이거는 많이 걸릴 텐데……

○조정훈 위원 지금 그 논리가 아니고요.

지금 이거 4000억 요구하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빚내서 지금 펀드 만들어서 11월까지 펀드 조성하고 민간 자금 유치하고 그다음에 이거 기업에게 쏘주는 시간은 연말 아니면 내년 초예요. 올해 경기부양에 무슨 도움이 돼요, 이게 솔직히? 정책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펀드를 쏘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출자하는 회사를, 벤처·스타트업 회사들을 다 선택해서 4000억을 다 소진할 수 있다고 진짜 생각하시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펀드 결성이 점차 점차 회복세에 있고 민간 자금도 지금 들어오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자금의 출자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펀드 조성……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민간자금이 들어오면 민간에서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아니, 민간자금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한국벤처투자의 올해 유보금이 어느 정도로 남아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유보금이라고 보기보다는 자펀드를 많이 구성해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투자 여유재원은 한 3조 정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스케줄이 돼 있는 그런 자금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00억을 하게 되면 출자금을 한국벤처투자에 단순

예치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지금 집행하는 과정 동안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연말까지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 공고가 나고 펀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대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되고 바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도 저는……

○소위원장 한병도 안도걸 위원님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차관님, 지금 우리 모태펀드를 얼마 정도 오래 운영을 했지요, 기간이?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지금 저희가 자펀드를 구성하게 되면 한 7년 정도 운영합니다.

○안도걸 위원 우리가 모태펀드를 개시한 게 언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모태펀드는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지금 물경 20년 동안 저희가 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는 곧 창업인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창업?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기술창업에 대한 종잣돈을 제공하는 게 바로 모태펀드란 말입니다. 이게 지난 정부 때 확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벤처시장에 돈이 말라 있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초기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마중물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연간 얼마 정도를 신규 투자를 했지요, 출자를 했지요, 모태펀드에? 한 1조까지 갔어요. 1조 정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1조 정도까지 최대한 정부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데 금년에 지금 얼마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금년에 5000억 정도 예산……

○안도걸 위원 그렇잖아요. 5000억이잖아요. 절반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해 온 대로 정도는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4000억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9000억 정도 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이 정도는 우리가 과거에 능히 집행해 온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를 정부가 제공을 해야만 민간에서도 대형투자가 일어나 가지고 적정한 벤처시장이, 투자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정부의 의지를 지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4000억도 어떻게 보면 적다, 그렇지만 우리가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적은 수준이지만 4000억 정도는 해 줘야만 정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읽고 민간의 대형투자 또 그리고 글로벌 있지 않습니까, 유망한 그런 벤처캐피탈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000억은 기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재도약 촉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과 그다음 페이지 2번 소상공인 재지원 사업 그리고 3번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사업, 이 3개 사업은 조정훈 위원님께서 철회의견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의 2번 재도약 촉진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마지막 감액 심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전액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므로 5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21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저는 일관성은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민생 추경이고 빚내서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만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폐업 및 코로나 소상공인에 관한 부채 탕감이나 재단보증이나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같은 건 저는 꺾지 않아야 된다는 게 개인적 소신입니다.

이와 반면에 지금 제가 500억 삭감을 요구하는 예산을 보면 지자체 이전하는 거예요. 지자체 7개 시도에 7000만 원인가요, 7억 원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70억입니다.

○조정훈 위원 70억씩 쥐 가지고 AI 사업,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해 봐라……

지금 빚 내서 추경하는 상황에서 이게 뭐하는 건가, 그냥 중앙에서 지방으로 돈 태우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특근매식비, 공공요금, 우편요금 다 넣어 놓고 그다음에 행정 소모품, 사업용 홍보품, 위원회 수당, 회의비…… 이걸 정말 추경의 ‘추’ 자에도 갈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이 주도해서 AI 대전환하자’, 동의하고 알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생 추경이고 빚 내서 하는 추경입니다. 소상공인분들,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게 맞고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AI 전환하고 싶으면 그쪽에서 예산 조정해서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빚 내서까지 지자체에 자본 이전해 쥐 가지고 진짜 평시처럼 위원회 만들고 홍보물 만들고 매식비 주고 운영하고 국내여비 다니면서 할 그런 추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이제 다 끝났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추경소위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한편으로는 많은 공부가 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만 지금 계속 깎고 있는 거예요. 이것 뭐 하러 깎습니까? 정부 하자는 대로 하세요.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미래도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지요, 미래를 위한 투자는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추경까지 해 가면서…… 정말 적재적소에 쓰는 것

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자까지 내고 빚까지 내 가면서 지금 이 시점에 안 해도 될 것을 해 가면서 하는 거, 우리도 한번 계속 ‘하라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감감합니다.

저는 평생 대학에서 35년 동안 교수, 총장을 하면서 여기 왔고, 우리 차세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인구는 지금 점점 줄어들어 가고 누가 이 빚을 감당합니까? 우리도 정말 계속 증액하자, 계속 한번 주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 진짜 공직자들 정말로 노(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지금 예산 감액은 다 한 것 같은데 마침 이 자료에 있어서 보니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지원비는 증액을 요청하셨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저희 보좌진 통해서 뉴스에 난 것을 봤는데, 민주당에서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검찰청 등등 다 지금, 대체로 운영실이에요. 그다음에 감사원 운영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작년에 예산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특활비 삭감했다고 살림 못 한다’는 황당하다고 했고 ‘쌈짓돈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느냐?’라고 한 얘기, 발언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슬그머니 대통령실 운영비 올리겠다고 예산 신청하시는 것은……

어떻게 좀……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생각해 보니까 필요하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도 살아보니까 없이 살더라고요, 대통령실 6개월 특활비 없이. 그러면 그냥 ‘올해는 없이 가고 내년에 여야 합의로 올리겠다’ 이러셔야지 이렇게 슬그머니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를 구십몇 억 이렇게 올리겠다고 요청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 조정훈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정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소영 위원** 슬그머니 올린 게 아니고요. 어제 종합정책질의 2일 차에서 조승래 위원이 구두질의를 하신 겁니다. 구두질의의 내용은 투명성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작년 본예산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그게 바로 본회의에 통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여야 협상이 있는 것인데, 그 사이에 사실 12월 3일에 불법계엄이 터졌지요. 12월 3일에 불법계엄이 터졌고 그리고 예산안이 12월 10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첫 번째 탄핵 의결과 두 번째 탄핵 의결 사이에 예산안이 여야가 협상해 볼 여지도 없이 정말 매우 경색된 상황에서 통과가 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고요.

물론 그때 저는 국회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금까지 너무 불투명하게 운영이 돼서 국민들이 신뢰를 잃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개선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여야 간에…… 삭감이 된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영원히 이 4대 권력기관의 특활비는 제로로 할 거냐 이것은 이제 심도 깊게 논의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프로세스 정비를, 기재부가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이 문제를 정상화시킬 생각은 없는지 이것을 구두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카메라로 다 중계되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어떤 민주당 위원도 이것을 밀실에서 몰래 끼워 넣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보면 오히려 서면질의로 특활비 복원을 신청하신 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세요. 여기 법무부 예산에 보시면 검찰 특활비 40억 증액하는 것 서면질의로 국민의힘 위원님들 아홉 분이나 이것을 넣으셨고요. 뒤에 보시면 감사원 특활비, 얼마지요, 이게? 7억 원인가요? 7억 원 증액하는 것도 국민의힘 위원님 네 분이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구두질의를 하지 않으셨고요. 민주당 조승래 위원은 구두로 그 문제,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이게 기재부가 손 놓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을 묻지는 않으셨지만 밝힌다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는 누구도 아닌 거잖아요. 일은 잘해야 되고 거기에 때로는 기밀성 예산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는 거지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봤지만요 기밀성 예산 자체의 존재를 부인한 다기보다는, 그런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너무 국회의 견제든 국민들의 신뢰든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불비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제로 떡값으로 쓴다거나 그걸로 돈봉투를 나눠 준다거나 용돈을 나눠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래 전부터 사건화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신에 기반한 문제 제기였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신이 많으니까 특활비 제도 자체를 앞으로 아예 없앨 건지, 그러면 다른 권력기관들까지 포함해야 되겠지요, 경호처나 이런 데들까지. 아니면 이게 특활비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제도를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을 하고 정상화시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국회는 의사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실 거고 저희도 그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지가 아니라 이게 수사기관·권력기관들이 기밀성 예산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제도개선을 전제로 해서 정상화시키는 것도 충분히 국회가 논의해야 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형수 간사님 말씀하고 또 이것 관련된 하실 말씀 없나요?

○임미애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이것은 증액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박형수 간사님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우리……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것 관련된 심사는 다 끝났지요? 아까 마지막 보류하는 걸로 하고 정리하고 또 저희들끼리 토론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저는 아무리 여야의 입장이 바뀌고 여야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예산안, 특수활동비를 청구하는 것은 저는 염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특수활동비 없다고 살림 못 사냐, 나라 경영 못 하냐. 만약에 계엄이 없고 조기 대선이 없었으면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이 특수활동비 없는 상태로 1년을 경영했을 겁니다, 비서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기 대선이 있어 가지고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이 예산을 다시 달라고 청구를 합니까? 저는 아무리 여야가 바뀌어도 이것은 너무 염치없는 짓이다.

본회의에서 예산이 삭감된 게 계엄 이후라고 했어요.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게 그 이전이잖아요. 11월 27일인가 29일인가 그랬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을 다 했으면서 그게 본회의 통과된 것이 계엄 이후이기 때문에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소한 이 예산을 요구하려면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부분이 투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삭감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떠한 점을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까 이 예산 살려 달라, 최소한 이거라도 있어야지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다 증빙자료를 첨부할 거예요? 카드로 쓸 거예요? 그러면 그거 특수활동비 아니지요. 특정업무경비로 쓰면 되는 거지요.

우리 당 일부 위원님들께서 검찰의 특수활동비하고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증액 요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민생, 마약사범 수사 또는 해외에서 범죄자를 인도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거기 각 나라마다 사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 이게 민생과 관련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 다 떠나서 민생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법무부 또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청구하는 빌미가 된다면 우리 다 철회할게요. 그런 식으로 몰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건 그것대로 만약에 그 청구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비판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 했다고 해서 대통령실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 예산편성하는 건 저는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 죄송한데 제가 한말씀만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소영 위원 11월 27일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라는 게 뭐 하는 곳인가요? 정치와 협상을 하는 곳이지요. 이번에만 하더라도 1차 추경 때 검찰 특경비 507억인지 삭감됐던 것 전액 복구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요구했던 지역화폐하고 협상을 한 겁니다. 그 협상을 통해서 살린 거지요.

11월 27일 이후에 2025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는 그 협상과 정치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고

요. 증액해 달라고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민생 예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폴리즘이다, 이재명표 예산이다 하면서 하나도 협의하지 않았어요. 예결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통과를 시켰습니다, 협상이 안 되니까. 그 이후에라도 대통령이 협상에 나설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협상이 아니라 계엄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박형수 위원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이소영 위원 예.

○박형수 위원 둘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토론하자고요?

○이소영 위원 어쨌든요.

○박형수 위원 이런 회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제가 짧게 마치겠는데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요.

그러면 그때 지적했던 걸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런 것들은 그 4개 기관에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때 한번 진짜 호되게 삭감을 당했고 그 이후에 6개월을 지내 봤는데 실제 방금 말씀하신 마약수사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특정비나 이런 것들로 원활하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이번 추경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시켜서 질문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특활비가 필요한 건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지, 없어서 운영이 안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국회에서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발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는 어떤 프로세스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런 것들 의견을 들어 보고 합리적이면 당연히 여야를 불문하고 받아 줄 수 있겠지요. 저는 이견 염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면 그건 작년과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특활비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염치없는 것이 다라고 얘기하는 건 작년에 어떤 과정과 맥락과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삭감됐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쌍방 토론이 되는데 다시 한번……

○조정훈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싸움을 하자는 건 전혀 아니고요.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조정훈 위원님 하시고……

○조정훈 위원 저는 좀 놀란 게 간사님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으로 일견 들리지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작년 예산 통과 시 예결위 통과하면서 각종 권력기관의 특활비 삭감은 어떻게 보면 다른 협상을 위한 하나의 협상 카드였다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정책을 갖고 협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견 대통령실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권의 가장 중요한 운영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초필수 예산을 갖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소영 간사님의 그 제안에 수긍이

됩니다. 대통령실이든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민주당과 이제는 저희도 요구하는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올해도 특경비 넣으면 안 됩니다. 맞지요? 그때 비판하셨던 그 내용이 국회가 이것을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 수단을 제공하기 전에는 올해도, 추경도 대통령실 특활비 넣어서는 안 된다는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토론이 계속되는데요 지금 증액하는 과정에서 오늘 토론 관련된 건 이어서 토론을 더 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진 조승래 위원님의, 공식적인 예결위원이 발언을 하면서 서류로 넘어오는 게 당연한 절차인 것 같고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서면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된 건 오늘 1차 토론을 했는데 더 증액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임미애 위원 아니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들으면서 사실은 작년과 똑같은 기준으로 올해도 또 적용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의 기준 가지고 올해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게 일을 풀어 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훈 위원 정권이 바뀌어도 기준이 바뀔 수는 없지요.

○박형수 위원 그 말씀은 안 맞……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박형수 간사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지난번 정권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이 특수활동비를 삭감을 했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이 그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뭐가 특별한 문제가 됐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됐었지요.

○박형수 위원 그게 문제가 설사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번 정권 때는 그렇게 하고 이번 정권 때는…… 진짜 이 말 내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내로남불 합니까?

○임미애 위원 그게 아니라 권력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요.

○박형수 위원 하여튼 그 말씀만 들으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저는 이 말에 동의 못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특수활동비가 지급이 되든 지급이 안 되든 결정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이번 기회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기준을 한번 국회가 만들어 보지요.

○김대식 위원 내가 사실은 토론이 될까 봐 안 했는데 그동안에 대통령부터 최고위원들 어록을 다 뽑아 왔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안 하겠으니까 두 분이서……

○소위원장 한병도 증액 심사 토론하시는 간사님께 그것 전달해 주세요.

이상으로 감액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사업과 증액 사업 등 아직 심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류 및 증액 사업 등 기타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간사님들과 위원장이 협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류 및 증액 사업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7인)

김대식 박형수 안도걸 이소영 임미애 조정훈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입법심의관 이형진

입법심의관 이동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예산실장 유병서

교육부

차관 오석환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이창윤

제2차관 류제명

기획조정실장 구혁채

통일부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국방부

차관 이두희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정책기획관 임철언
국가보훈부
차관 이희완
기획조정실장 김주용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제2차관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문신학
제2차관 이호현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
제2차관 이형훈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첨단의료지원관 신꽃시계
환경부
차관 금한승
기획조정실장 손옥주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상경
제2차관 백원국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기획조정실장 이시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노용석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권대영
기획조정관 김기한